

잠재
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시대를 여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2026. 7. 14.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 2026년 상반기 평가	1
II . 거시경제 여건 변화	4
III . 2026년 수정전망 및 2027년 경제전망 ...	6
IV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7
1. 중동전쟁 이후 전략	8
2. 잠재성장률 반등	19
3. 구조적 문제 대응	32
[첨부1] 2026~2027년 한국경제 상세전망	44
[첨부2] 주요 정책과제 Action Plan	52

I. 2026년 상반기 평가

1 경제상황 평가

□ 우리 경제는 연초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성장에 탄력

- (성장) 계엄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확대 되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 들어 중동전쟁 악재에도 성장이 가속화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비, %): ('25.上)0.4 → (下)1.8 → ('26.1Q)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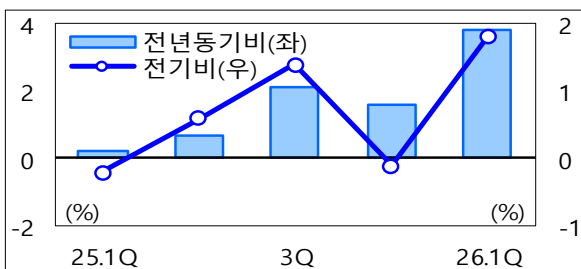
↳ '26.1Q 실질GDP 1.8%(전기비, 5년 6개월 만에 최고), 경상GDP 17.1% 성장(전년비, 30년 6개월 만에 최고)

- (수출) 1~4월 수출액은 日·伊 넘어 세계 5위로 상승(7→5위), 1~5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액 기록하며 이미 작년 연간치 상회

* 통관수출(전년동기비, %): ('25.上)0.0 → (下)7.4 → ('26.1Q)38.4 → (2Q)57.5

** 경상수지(억불): ('23)325 ('24)1,000 ('25)1,231<종전 역대 최대> ('26.1~5월)1,413

한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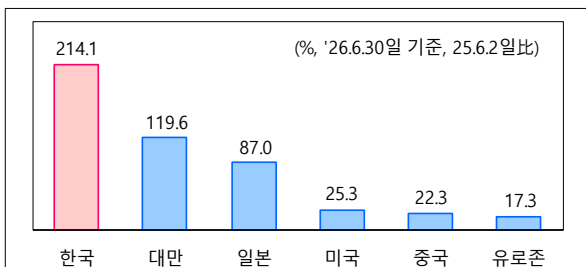


국가별 수출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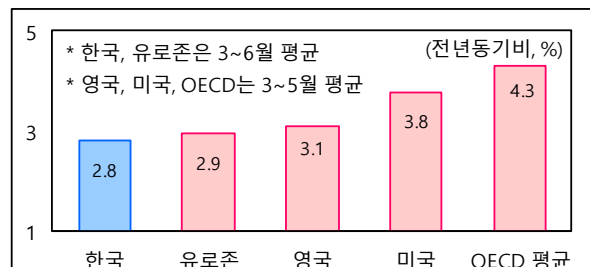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25년 1-4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태리	한국	영국
26년 1-4월					한국	대만	이태리	일본

- (증시) 주요업종 호조, 증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시가총액 세계 7위로 상승(13→7위, 6.30일 기준), 정부 출범 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
- (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도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3~6월 평균 소비자물가 $\Delta 0.7\%p$ 완화) 등으로 대응하여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



OECD 주요국 물가상승률(중동전쟁 이후)



□ 중동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도 신속·과감하게 성공적 대응

- 대통령 중심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3월}하여 가용 재원·수단 총동원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3월}, 유류세 인하^{3월}, 나프타·석화원료 긴급 수급조정조치^{3월}, 원유 대체물량 확보^{3월} 등 민생영향 최소화에 총력
 - 26.2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하여^{4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 지원(5월까지 국비 99% 집행)함으로써 서민층 부담 완화에 기여

⇒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중동전쟁 대응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

* S&P(4.29일): 공급원 다변화, 안정적 석유 비축분 보유로 에너지 공급 충격에 대한 완충 여력 확보
 OECD(6.3일):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정부정책이 에너지 공급충격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완화

□ 잠재성장을 반등 원년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 가속화

- (잠재성장률) AX·GX 가속화 등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가속화
 - * 출범(25.12월) 이후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등 14.6조원 규모 승인
- (구조혁신 및 양극화 극복)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지역균형 정책을 본격 이행*하고, 청년 자산형성·노후 소득 지원 등** 모두의 성장 뒷받침
 - * 개정 노조법 시행(3.10일), 아동수당 비수도권(+0.5만원)·인구감소지역(+1~3만원) 추가지원 등
 - ** 청년미래적금 출시(6.22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축소(6.17일), 주택연금 개편(2.6일) 등
- (리스크 관리) 국내시장복귀계획 출시 등 외환안정 3중 세제지원 신설^{3.31일}, 국고채 발행물량 조정 등으로 금융·외환 안정 총력
 -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 발표^{1.2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9일}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적 관리 노력에 최선

⇒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 현안 대응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 등 일부 과제는 추진일정이 다소 조정

[참고] 2026년 상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과제 추진상황 평가

- ◇ 「'26년 경제성장전략」의 상반기 주요 정책과제 88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중동전쟁 등 어려운 정책여건 속에서도 84개 과제는 계획대로 이행중
- 다만, 일부 과제(4개)는 입법 절차, 절차상 시간소요 등을 감안하여 「'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보완·구체화 추진

1. 추진 완료 : 46개 과제 (52%)

- (대책수립) 민간투자 활성화*, 주택연금 개선** 등 주요 대책 발표(11건)
* BTL 특별인프라펀드(1,000억원) 신설 등 / ** 취약고령층 지원 확대, 실거주 의무 완화 등
- (법령개정) 지방주택 수요확충, 생산적 금융 및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등 반영한 주요 법령 개정 완료(16건)
* 인구감소(관심)지역 양도·종부세 주택수 미포함, 국가전략기술(차세대전력반도체 등) 확대, 코스닥 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등 '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2.27일) 등
- (추진체계·제도개선) K-GX 추진단 신설 등 주요 추진체계 구축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등 제도 개선 과제 이행 완료(19건)
* 글로벌 수탁은행 결제계좌 개설·관리 허용, CLS(외환동시결제) 기반 증권결제를 위한 제도정비 등

2. 정상 추진 중 : 38개 과제 (43%)

- (대책수립) K-GX 전략,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 등 마련 중(13건)
- (예산집행) 생활형 R&D(레시피, 브랜딩 등)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AX 확산(AI 공장 등) 지원 등 '26년 예산사업의 원활한 집행(10건)
- (제도개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중(15건)

3. 추가 보완·재검토 필요 : 4개 과제 (5%)

- 일부 과제는 법령 제·개정, 절차상 시간소요, 추진방향 재검토 등으로 추진 일정이 다소 조정
→ 적극적 입법 지원,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보완·구체화
- * (법령)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지주회사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대책·제도) 외투기업 R&D 투자 애로 해소, 공동농업 경영체 지정요건 완화

Ⅱ. 거시경제 여건 변화

① 최근 반도체 호조는 거시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냐, 안정적 관리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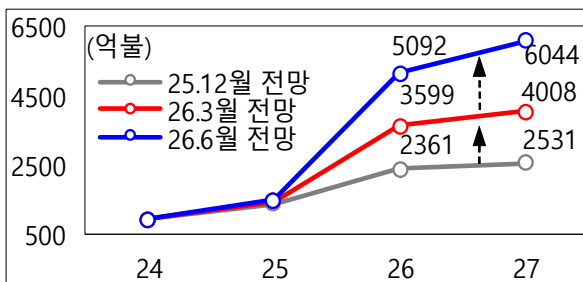
- AI 대전환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수출·증시 등 주요 경제지표 호조로 이어지며 경제에 긍정적 영향
 - 중동전쟁으로 주요국 성장전망은 하향된 반면, 우리 성장률은 큰 폭 상향* + 경상성장률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 전망**

* '26년 성장전망(%): (KDI)1.9→2.5 (한은)2.0→2.6 (OECD)1.7→2.6 (IMF)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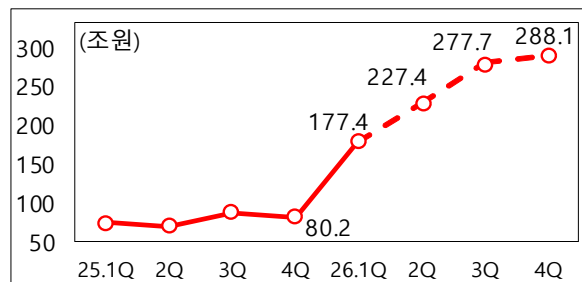
**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 크게 개선 → 수출 디플레이터 대폭 상승

⇒ 이는 국민소득('26년 4만불 근접) 및 재정여건 개선 등 기회요인

글로벌 D램 매출전망 변화(Gartner)



KOSPI 상장사 기업실적 전망



-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자산가격을 자극할 위험
 - * (예) 단기 주가 급등이 外人의 한국증시 리밸런싱 수요를 야기하며 환율 변동성 확대
- 명목지표 호조 등에 따른 물가·환율·금리 상승이 한계차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

② 성장세는 되살렸지만, 부문별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과제 여전

- 그간 비교우위 있는 IT 부문에 성장이 편중된 반면, 非IT 중심 지역산단은 쇠퇴하며 산업·지역 간 양극화 구조 확대
 -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부문(수출-내수), 산업(반도체 등 IT-非IT), 지역(수도권-지방) 간 구조적 편중이 심화될 우려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방압력 지속

3 중동전쟁으로 부각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해결 필요

- 고유가發 인플레이션, 공급망 교란에 따른 취약부문 생산·고용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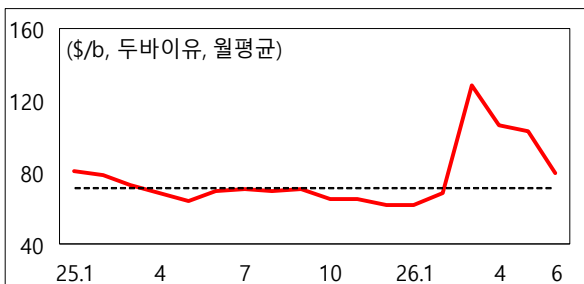
* 석유류 물가상승률(%): ('26.1Q)2.5 (2Q)23.6 / * 취업자 증감(만명): ('26.1Q)18.3 (4)7.4 (5)△4.0

- 중동전쟁 등 최근 찾아진 지정학적 충격*을 통해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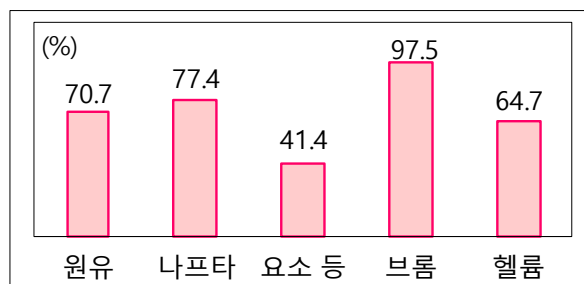
* ('22)러우 전쟁 / ('23)이스라엘-하마스 분쟁 / ('24)홍해 사태 / ('25)이스라엘-이란 충돌 / ('26)중동전쟁

- 최근 국제무역 질서의 분절화·블록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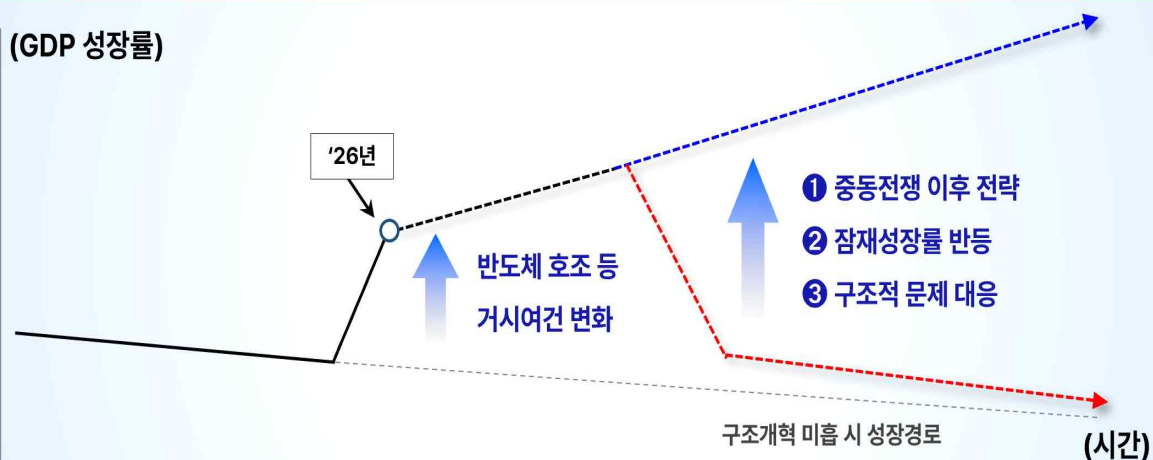
주요 핵심소재 중동의존도



◇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

- ⇒ 거시여건 변화로 조성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활용해
① 중동전쟁 이후 전략, **② 잠재성장을 반등**, **③ 구조적 문제 대응**(양극화 완화 등)에 박차

(GDP 성장률)



Ⅲ. 2026년 수정전망 및 2027년 경제전망

- ◇ 작년 하반기부터 확대된 성장세가 반도체 호조 지속, 중동전쟁 영향 완충을 위한 추경 등 정책대응에 힘입어 올해 더욱 가속화
- ◇ 중동전쟁 이후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해 성장세 확대를 통한 국민소득·재정건전성 개선의 선순환 구조 확립

	2025년	2026년 ^e		2027년 ^e
		[당초]	[수정]	
■ 실질 GDP 성장률(%)	1.1	2.0	3.0	2.2
- 경상 GDP 성장률(%)	4.4	4.9	12.3	4.6
■ 취업자증감(만명)	19	16	15	17
- 고용률(% , 15세 이상)	62.9	63.0	63.0	63.1
■ 소비자물가(%)	2.1	2.1	2.6	2.2
■ 경상수지(억불)	1,231	1,350	2,900	2,450
- 통관수출(전년비, %)	3.8	4.2	40.0	1.0
- 통관수입(전년비, %)	0.0	2.0	20.0	3.0

① (성장) AI發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압력을 추경 등 정책효과가 완충하며 '26년 3.0% 성장 전망

- 경상성장률은 반도체價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12.3% 성장하며 '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 예상

* 반도체 수출물가(전년동기비, %): ('25)5.5 / ('26.1)73.4 (2)87.2 (3)116.8 (4)148.3 (5)163.3

- 1인당 GNI 4만불 근접, 국가채무비율 40%대 진입 전망('26년 50.6→47.0%)

② (고용) 취업자수는 성장세 확대에도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으로 15만명 증가 예상

③ (물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2.6% 상승 예상

* 국제유가 전망(\$/b, 두바이유): ('25)69 → ('26^e)85 [1~6월 92] → ('27^e)73

④ (경상수지) 상반기 실적 호조, 반도체 호조세 지속 등으로 당초 예상(1,350억불)을 큰 폭 상회한 2,900억불 흑자 전망(사상 최대 규모 재정신)

IV.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책 목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불)

기본 방향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 중동전쟁 이후 전략 추진
-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반드시 달성
-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를 통한 구조적 문제 대응

“3대 분야 - 6대 과제”

중동전쟁 이후 전략

①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① 통합대응체계 구축 및
조화로운 거시정책 운영
- ②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 ③ 주거 안정 지원

②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 ① 확실한 공급망 구축
- ②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
- ③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③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 ①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AIDC, 피지컬 AI)
- ②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
- ③ 성장동력 육성기반 강화

④ 지방주도성장 강화

- ①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
- ② 지역 생활여건 강화
- ③ 지방성장기반 마련

구조적 문제 대응

⑤ 양극화 극복

- ① AI發 고용 재편 대응
- ② 청년도약 뒷받침
- ③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성장과 재기 지원
- ④ 노동시장 격차 완화

⑥ 구조혁신 본격 착수

- ① 생산적 금융 대전환
- ② 공공·세제·재정 혁신 제도화
- ③ 인구감소 대응 및 인재양성
- ④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 ⑤ 과감한 규제 합리화
- ⑥ 안전한 국가 구현

1. 중동전쟁 이후 전략

-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물가·환율·금리 3高 리스크 관리 철저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 운영**하고 대외요인에 흔들림 없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1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춰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화로운 거시정책 운영**

- (통합대응체계)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 위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통합시장점검간담회) 운영
 -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 회의체 신설 *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 필요시 국토부 등 참여
- (재정)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지속
 - (하반기)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는 만큼, 재정집행 노력 보다 강화
 - ▶ (중앙재정) 상반기 집행률 66.5%로 양호한 수준, 하반기에도 지속 관리('25년 집행률 97.7%)
 - ▶ (지방·교육재정) 추경으로 교부세·금이 증액된 만큼 집행관리 강화('25년 집행률 지방89.4%, 교육94.9%)
 - ▶ (공공기관 투자)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를 2조원 초과달성(70 → 72조원)
 - ▶ (정책금융) 당초 계획대비 약 5조원 확대(633.7 → 638.4조원)
 - ('26~'2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미래대응기금 신설)
- (금융) 성장·물가, 금융·외환시장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내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거시금융정책 운영
 -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등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조를 유지하되,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 (부문별) 양호한 소비·투자·수출 증가세 유지 위한 정책 지원 지속

- ▶ (소비)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전년대비 확대 개최(10.29~11.15일, 18일간), 지방비 추가편성 독려 등 통해 전기차보조금 안정적 지원
- ▶ (투자)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신설(800조원), AI 데이터센터 구축(550조원)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 ▶ (수출) ^{가칭}'중소·벤처기업 2030 글로벌화 위한 수출 성장전략' 마련('26.下)
* (예) 수출 소주기 연속적·심리스(Seamless) 지원, 품목별·시장별 맞춤 지원, 수출안전망 구축 등

◇ 중동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① 식유류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완화 등 高물가 총력 대응

【 식유류 가격 안정 】

-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 및 수급 상황, 민생부담 등을 감안하여 최고가격 해제를 검토하고,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여부 등 검토

【 장바구니 체감물가 완화 】

- (할인 지원) 농축수산물 소품목 최대규모 할인행사 추진(+3,500억원), 농축수산물 참여업체 확대(온·오프라인업체 75→90개, '26.8월~)
* (현행) 쌀, 양파, 계란, 돼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마른김 등 22개 농축수산물, 1인 1만원/週 → (7~8월) 할인가능 품목을 농축수산물 소품목으로 확대, 1인 1만원~최대 3만원/週
- 명절기간 중심으로 발행되던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을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 (현행) 설·추석 각 100억원, 150억원 → (변경) 월 200억원 규모 정기 발행(7~11월)
- (공급가 인하) 납품단가 인하 및 도매시장 출하·수입 확대 등 공급·유통 소과정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가격하락 유도

- ▶ (계란) 납품단가 인하(농협 위탁) 확대(2→3천원/30구, +196억원)
- ▶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해 출하장려금 2배로 확대(2→4만원/마리, +19억원)
- ▶ (수산물) 고등어 정부 직수입·직수매 후 저가 공급(+500억원), 갈치·오징어 등도 직수매 후 할인 방출(+150억원)

-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개 추가수입(+997억원, 7~8월)하고, 중소형 유통업체 및 제과·제빵점 등 자영업자에게도 공급
- 특사단* 파견(7.6~17일)을 통해 영국·페로제도 등 고등어 新 공급처 발굴
* 해수부, 해양수산개발원, 수협, 수입업체 등 참여

- (할당관세) 하반기 중 수입과일·식품원료 등 먹거리 49개 품목에 최대 30%p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가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현장점검 강화*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강화, 반출명령 신설 등 세법개정안에 반영('26.7월)

		주요 품목	개수	기간
기 존	연중적용	옥수수, 커피, 설탕, 대두, 매니옥칩, 사료용 유장분말·겉보리 등	27개	~'26.12
	기간연장	냉동과일, 으깬 파인애플, 처리기타과일, 과일컵테일, 사과농축액, 코코아가공품(3),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13개	~'26.12 (수입과일 ~8.15)
	신규	기타과실주스,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포도농축액 등	9개	~'26.12

【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물가안정법 개정, '26.下)

* (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상당 금액 이하, 이익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 등

-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및 개별법 개정 추진, '26.下),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 검토

【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

- (공공요금)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하반기 동결 기조 하에 관리

- 지방공공요금 모니터링 통해 인상시기 이연·분산 및 인상 최소화

- (유류비) 화물차·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까지 지급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연장 검토

* 보조율 50→70% 상향('26.3월) + 중동전쟁 전 대비 지원한도 52.8% 상향('26.5월)

- (통신비)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추진(통신3사→알뜰폰), 알뜰폰 중소·중견 기업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50→90%)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마련('26.7월)

* '26.하반기 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 → '27.1/4분기부터 적용

- (에너지요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 사용가구(22만가구)에 대한 추가지급(+14.7만원) 동절기 적용(+325억원, '26.10~'27.5월)

※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안정, 부담경감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9월)

② 시장 변동성 관리, 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원 등 高환율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

- (외환건전성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3개월) 및 외화지급 부리**와 고도화된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유예 연장(6개월)
* 금융회사 비예금성외화부채(만기 1년 ↓) 대상 / ** 금융기관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한음)에 이자 지급
- (역외 원화거래) 역외 원화 접근성 제고를 통해 실물인도거래(DF)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등 DF 친화적 개편방안 마련(26.下)
- (외화외평채) 금년 잔여 발행한도 20억불 추가 발행으로 대응여력 확충

【 중소기업의 高환율 부담 지원 】

- 高환율 등 부담中企에 14.9조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필요시 규모 확대
*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23.7조원) 잔여여력 13.8조원 + 高환율 피해기업 지원 신규자금 1.1조원
-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內 高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 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1,000억원 내외 검토)
* (현행)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필요 → (개선) 高환율 피해 업종(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 등)은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 가능
- (수은) 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1조원) 및 高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조달원가 수준 금리 적용, 0.3조원)
* 중동상황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內 신설
- (보험)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환변동보험(무보) 지원을 확대 (26년초 1.2→改1.3조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확대(15→30%, ~27.4월)
-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보 수입 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 우대(0.3조원, ~27.4월)
- 환위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 한시 확대(1,000→2,000만원) 및 보험료 선금 지원* 추진
* (현행) 수출바우처 사업기간 내 보험계약 미종료시 지원 불가(보험계약 종료후 정산지급) → (개선) 보험료 선금 지원으로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부담 완화
-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법인·부가·소득·관세 납부기한 연장
- 환율이 납품대금연동제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단체 컨설팅 제공, 상생금융지수 평가지표 마련 시 高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실적 반영

③ 취약차주 금융접근성 제고, 연체채권 관리 등으로 高금리 부담 완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통해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검토('26.下, 금통위 의결 필요)
* 한은이 정한 목적에 맞는 대출실적에 비례하여 금융기관(은행)에 저리(現 1.0%) 자금 제공
- (기은) 경영애로에도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상 우대금리(최대 $\Delta 1.8\%p$) 제공하는 희망Dream 대출 공급 2배 확대(1.5→3.0조원)
- (산은) 정부 신용에 기반해 저리조달한 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온렌딩 지원 확대(+0.4조원<9.2→9.6조원>, '26.下)
- (중진공) '26년 하반기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 노력
- (소진공) 금융권 고금리(7% 이상)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25.6말 → '25년말 승인 대출까지 확대

【 서민금융 지원 강화 】

-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방안 검토
- 중·저신용자들의 신용 빌드업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를 검토하고, '27년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공급규모 확대

【 연체채권 관리체계 및 신용평가체계 개편 】

-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26.7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26.下)
- 청년·주부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썬파일러(thin-filer)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26.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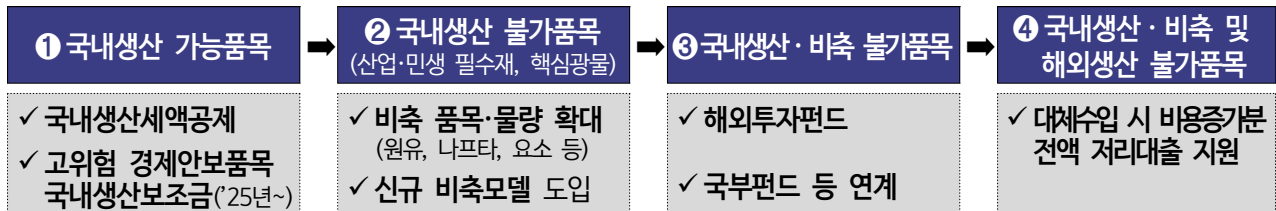
◇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강화 】

- 3기 신도시,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6.8천호), 인천 계양(1.1천호) 등 1.2만호 착공('26.下)
 - (도심공급)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을 '30년→'29년으로 1년 단축, 하반기 부지 사전조사, 이전계획 수립 등 절차 신속 추진
 -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절차 병행·조기화 등 택지 속도 제고방안* 마련('26.下)
 - * (예) 지구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지구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 조기착수 등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검토('26.下)
 - * (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를 완화(75 → 70%,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
- 공공임대 개선방안 마련 및 서민 전세지원 강화
 - (공공임대 다변화) 공공임대 품질 제고 및 청년층 대상 공급을 확대하고 기축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 신설
 - (전세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 추진('26.下)
- 시장교란행위 근절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근거법 제정 추진('26.下)

【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이용의 합리화 】

- (개인)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법인) 토지 과세 분류기준 합리화, 보유·양도시 세 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등 통해 토지의 생산활동 활용 유도
 - * (예) 기업 선제적 수요를 전제로 국가지원 임대전용산단 지정 검토, 산업용지 중 임대공급 의무 강화 등
- (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의무화(농지법 시행, '26.8월)

◇ 품목별·단계적 대응으로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 구축**① **(국내생산 촉진) 국내생산 인센티브 및 재활용·재자원화 지원 강화**

- (인센티브)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생산 초기 결손으로 인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 원가 경쟁력 열위에 있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국내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보조금 지원 지속(~'27.上)
 - (재활용·재자원화) '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現 7%)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 추진
 - 전기차, 전자제품 등의 재활용 과정(분리·해체)에서 핵심광물 함유 폐부품을 우선 분리·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 개선('27년)
 - 폐영구자석(희토류)을 순환자원으로 신규 인정·지정('27년)하고 전자제품·자동차의 폐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26.8월~) 추진
 - 산업·안보 중요성이 큰 희토류에 대한 재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 * (예) 폐영구자석 재자원화 양산 지원 등 80.8억원

② **(전략적 비축) 비축 품목·물량 확대 및 비축 역량 고도화**

- (비축 확대)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비축 및 기존 비축물량 확대

- ▶ (비료용 요소) 원료 및 완제품 신규비축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6.下)
- ▶ (인산이암모늄) 탄소비축 업체참여 유도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지원 검토
- ▶ (나프타) 비축 필요성 및 운영방안 검토 위한 연구용역 추진('26.下)
- ▶ (원유)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주요 유종 비축총량 확대
- ▶ (비철금속) 비철금속(6종) 비축 목표일수 재산정 및 5개년('27~'31년) 비축계획 수립('26.8월)

- (비축 인프라) 보관용기 적재·관리 자동화 등 가능한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석유 비축시설(2천만b 이상) 증설
 - * 새만금 국가산단 내 일반창고 6개동, 특수창고 4개동 구축 추진 중('28년 완공 목표)
- 주요 산유국(사우디, UAE 등)과 국제공동비축 협력 물량 확대 추진
- (비축 시스템) 차량용요소 등 재고순환 필요품목의 경우 타소비축 방식 외에 신규 비축모델* 시범 도입('26.8월)
 - * 정부가 직접 비축하여 연간 사용량을 약정한 기업에게 상시 판매하는 방식, 방출분만큼 추가 구매하여 보충하고 공급망 위기 시에는 약정기업에 정부 비축분을 우선 방출
- 비축 공백 최소화 위해 타소비축을 상시공고 체계*로 개편('26.12월)
 - * (현행) 계약 종료 후 공고, 사업자선정, 계약 등에 2~5개월 소요 → (개선) 상시공고(계약 종료 이전 등)

③ **(해외생산능력 확보) 해외공급망 투자 확대 및 인내자본 연계 강화**

- (해외투자펀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요소·핵심광물 등의 해외생산 기반 구축 등을 위한 해외공급망투자 확대('27년)
- (인내자본 연계) 국부펀드, 정책펀드(PIS펀드, 국가별 전략펀드 등), 개발금융 등 활용*해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공급 우선협상권(off-take) 확보 지원
 - * (예) 해외에너지·광물 인프라사업(美 리튬·붕소 등)에 대한 장기 지분투자 및 금융지원 추진

④ **(수입선 다변화) 중동 등 특정국 高의존품목 대체수입에 대한 지원 확대**

- (금융지원)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통해 전액 저리대출* 지원하여 수입비용 부담 경감
 - * 특정국 의존도 80%이상 품목 대상, 기존 80~90% → 개선 100% 한도(최대 2.3%p 우대)
- (도입선 다변화) 非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을 추진('27년)하고 윤임 지원* 등을 통한 원유 다변화 확대
 - * 다변화 원유 도입 시 중동산 대비 초과윤임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16원/리터) 환급제도 개편 등 검토

◇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

【 '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 】

↳ (태양광) '25년 30.8GW → '30년 87GW, (풍력) '25년 2.5GW → '30년 9GW

- (태양광) 공공주도 대규모 입지 발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이격거리 합리화 등으로 '30년까지 87GW 보급('25년 30.8GW)

* 시화화용 등 간척지, 평택향평택호, 접경지, 석탄발전 폐부지 등 GW급 대규모 태양광 부지 발굴

** '26.6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및 기간 연장 8→23년)

- (풍력) 육·해풍 인허가 밀착 지원, 해상풍력발전 전용선박(15MW+급) 등 확보, 정책펀드* 투입 등으로 '30년까지 9GW 보급('25년 2.5GW)

* 국민성장펀드(신안우이 해상풍력 7,500억원, AWP 영양풍력 600억원 지원), 미래에너지 펀드 등

- (전력망) 서해안 해저 송전망(고압직류송전망^{HVDC} 기반)을 신속히 구축 (~'30년대)하고, 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투자지역에 전력망 적기 구축 지원

【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및 냉난방 전기화 】

- (재생e 단가인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재생e 설비투자 의무 부여('26.下)** , 경쟁입찰 및 장기고정가격계약 일원화 등으로 규모의 경제 구현

* 발전단가: 태양광('26년) 150원 → ('30년) 100원(△33%) / 육상풍력('26년) 180원 → ('30년) 150원(△16%) 등

** (현행) 재생e로 일정비율 발전 의무 → (개선) 국가 재생e 보급 목표에 맞춘 사업자별 설비 확보 의무

- (이익공유) 햇빛소득마을 확산('30년 3,000개 이상), 바람소득마을 모델 구축,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 투자기회·수익 제공 등 국민체감 확산

- (냉난방 전기화) 단독주택 히트펌프 보급 확대(145억원, '26년), 에너지 제로주택* 실증('26.下) 등 '30년 히트펌프 69만대 보급 달성 지원

* 태양광+ESS+히트펌프+전기차 충전 등 전력생산-저장-사용을 자체 해결하는 주택

- 공동주택용 히트펌프(냉난방 일체형) 실증(~'27년) 및 공동주택 도입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예: 히트펌프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 등) 검토

【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 대전환 】

↳ 저탄소 공정 도입 등을 통해 '35년까지 산업부문 탄소 △24% 이상 감축 목표

- (주력산업 전환)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로드맵 마련 및 기술개발*, 설비교체, 시장창출 등 지원

* (철강)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26~'30년), (석화) 전기로 NCC 원천기술개발('23~'28년) 등

- (순환경제) K-에코디자인 도입, 재생원료 설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30년까지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량 △30% 감축
 - * 재생원료 설비(추정138억원), 광학선별기(216억원) 및 전처리시설(91억원) 지원
 - ** 비율·품질 등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산단 내 자유로운 순환 이용 위한 규제특구 신설 등
- (녹색산업 육성) 재생e-SMR·전기차 등 주요 녹색산업 핵심기술을 상용화하고 국내 생산기반 강화 및 녹색제품 공공조달 확대
 - 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예: SMR) 신설
 - * 구체적인 기술·시설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27.1월경) 시 검토 예정
 - 에너지 공기업(한전 등) 주도 下 민간기업이 공급 협력사로 참여하는 K-에너지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통한 녹색산업 수출 경쟁력 극대화
 - * 공기업 + 전력기자재 + 금융 등 협업하고, 한전 등 공기업의 해외진출 경험·신뢰도를 활용
 - SMR 특별법('26.9.11일 시행) 바탕으로 i-SMR(경수형) 상용화* 기술, 차세대 SMR(비경수형)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기술 개발 병행
 - * i-SMR('35년, 기장) 운영허가 획득을 위한 성능·안전성 검증 및 기자재 실규모 시제품 제작 R&D
 - ** 국방·우주 수요 기반 초소형모듈원자로(MMR) 개발 목표 및 추진 전략 수립(~'26.12월)
 - 텐덤셀 상용화 기술* 및 초대형 터빈 기술** 개발 등으로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 재건 및 미래 게임체인저 기술·제품 선점
 - *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지원('26~'30년, 1,818억원) / ** 20MW+급 초대형 터빈 기술개발('25~'30년)
 - 전기차 구동모터 성능 개선 및 배터리 소재 혁신 등 핵심기술 개발로 공급망·가격경쟁력 확보하고 보조금 등 지원 유지·확대

【 녹색투자 및 기후기술 개발 가속화 】

- (녹색투자) 10년간('26~'35년)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790조원 지원, 이중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중점 배분
- (기후기술) 제2차('27~'31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마련('26.9월) 등 민간수요·AI 기반 기후기술 첨단화 가속
 - * (주요 내용) 무탄소 에너지 공급 역량 강화, 기후예측 고도화, 혁신생태계 조성 등

※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26.3분기, 관계부처 합동)

◇ 중동전쟁 이후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 (중동) 총 60억불 先금융(수은·무보) 등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고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KIND 내) 신설 등 인프라 협력 추진
 - G2G 협력 프로젝트 발굴, 통합 마케팅*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 * 해건협·플산협·수은·무보 등이 중동 주요 발주처 대상 면담 시 우리 건설·운영사 동반 등
- (미국) 글로벌 관세(10%) 종료 후, 한국에 대한 관세복원 수준이 기존 韓美 관세합의(15%)에 따른 이익균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
 - 한미전략투자공사·특별기금 신설(6.18일) 후 투자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미국 내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 추진(D.C. '26.3분기)
 - * 사업관리위(산업부) 검토 → 운영위(재경부) 투자의사 결정 → 국회 보고 → 對美협의를 → (확정시) 투자 집행
- (중국) 對中 서비스 수출 확대 기반 마련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지속
- (인도)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가속화하고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출범('26.12월), 재무장관회의 재개 등 경제·산업 분야 소통채널 강화
 - 한-인도 경제협력 전담반 신설 및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구축
- (다자)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 검토
- (북극항로) 하반기 시범운항('26.8~9월, 부산-로테르담)을 시작으로 극지 운항 경험·데이터를 축적하여 북극항로 상업운항 기반 마련

【 경제협력 수단 고도화 】

- (전략수출금융)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금년 내 국회 통과 추진
 - * 방산 등 대규모장기 전략수출 금융 지원, 이익 일부를 기여금 형태로 산업 생태계 발전에 환류
- (개발금융) 민간재원 동원, 新투자방식(지분투자·보증 등) 등으로 개도국 메가프로젝트 참여하는 '한국형 개발금융' 법·제도적 기반 마련('26.下)
- (한국형 AI ODA) 우리 기술·부품에 기반한 「AI 솔루션 + AI 데이터 센터 + 신재생에너지」 패키지(K-AI 패키지)의 개도국 확산* 추진
 - * EDCF, KSP, MDB 신탁기금·협조용자, 개발금융을 체계적으로 연계·활용

2. 잠재성장을 반등

- ◇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을 반등** 구현

1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 ◇ **3대 메가프로젝트** 중심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강국 도약

① 생산능력 확충, 차세대 반도체 지원으로 **대체불가 K-반도체 성공 신화 완성**

【 메모리반도체 생산능력 확충 】

- 수도권 팹(용인·평택)을 조기 완공해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반도체 팹(4기) 구축에 총 800조원 투자

- ▶ (용인·평택) 기존 수도권에 계획된 팹 건설기간 획기적 단축(일반산단(SK) 12년, 국가산단(삼성전자) 7년) 첨단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트리니티 팹 구축(~'31년, 0.9조원)

- ▶ (서남권)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 + 전력·용수 등 인프라 신속 공급
선도기업과 대학·연구원* 중심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구축(~'30년, 290억원)

* (대학) GIST, 전남대, 한전공대(나주) 등 / (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광기술원 등

- 충청권은 HBM 팹(온양·천안) 건설 등 156조원 투자로 패키징 거점화, 영남권은 기존 산업 기반 등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혁신 거점 육성

- ▶ (부산: 전력반도체) 인프라 및 기업 투자 지원*으로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육성

*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센터 공공팹 구축(~'28년, 400억원),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시 국비(200억원) 지원

- ▶ (구미: 소재·부품) 실증 인프라 집중지원*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기지 구축

* 반도체 장비 챔버용 테스트베드(~'30년, 400억원),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28년, 300억원) 등

【 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 】

- (R&D) 미래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확대

- ▶ (차세대 메모리) HBM 이후의 차세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개발 지원(~'32년, 0.2조원)

- ▶ (NPU) AI 모델과 일체형으로 최적 설계한 데이터센터용 AI반도체 기술 개발(~'31년, 0.7조원)
미래차·로봇·방산 등 분야별 AI 수요에 특화된 NPU 개발 본격화(~'30년, 1.3조원)

- ▶ (화합물 반도체) SiC 전력반도체 고도화, 질화갈륨(GaN) 등 차세대 소자 개발(~'32년, 0.5조원)

- ▶ (첨단 패키징) 고집적 패키징의 핵심 공정·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31년, 0.4조원)

- (인력) 반도체 특성화대학(원)(²⁶26→³⁰30개) 및 반도체 아카데미(²⁶4→³⁰6개) 확대, Arm School*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 가속화

* GIST 내 설치 및 통합 설계교육 운영, 교육과정을 공공 나노팹과 연계해 현장형 인력 양성

- (지원) 재정·금융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 금융·국민성장펀드(1.7조원) 등 정책금융 집중 지원, 세제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 해외 의존도(98.9%)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기술개발↔제조·양산↔생태계 조성) 수립('26.3분기)
- * 국방반도체법 시행('26.12월) 계기, 우선구매·수의계약 등 정부 주도 수요창출 적극 추진

【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주기 지원 】

- (기술) 공공·민간 수요연계형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R&D* 추진('26.下)
- * 에너지그리드, 방산 등 수요 기반 R&D 통해 전력반도체 개발 → 국내 파운드리 주도로 성능 검증양산
- (양산) 전력반도체 양산·실증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상용 파운드리 구축방안 검토(예: 합작법인 설립, 설계·소부장 기업과 협력방안 등)
- (구매) 국가 안보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 조항 신설(반도체 특별법) 등 공공부문(전력망·데이터센터 등)이 수요창출 확대 견인

② AI 데이터센터 구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대체불가 초격차 유지

【 AI 데이터센터 및 글로벌 허브 구축 】

- (AI 데이터센터)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투자유치 포함)을 투자하고 '28년 상반기 내 착공, '29년부터 단계적 운영
- * (SK) 울산(1GW) + 권역별 추가 검토(4GW), (GS) 동해(2.4GW), (네이버) 세종+α(1GW)
- AI 데이터센터의 IT, 클라우드·SW, 전력·냉각 등 기술·장비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으로 국가 전략산업화 추진('27년)
- AI 데이터센터 특별법('27.3월 시행)에 근거해 AI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 거점화
- (AI 고속도로) GPU 약 5만장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국가 AI 프로젝트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27년 배분계획 선제적 수립('26.下)
- * 정부 구매 약 2.3만장('25~'26년), 슈퍼컴 6호기 약 0.9만장('26년),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약 1.5만장 이상('28년)
-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26.3분기), 슈퍼컴퓨터 6호기 운영 개시('26.下)

- (글로벌 AI 허브) 입지 선정, 지원단 구성, 국제기구 MOU 체결 등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 추진
- 5개 다자개발은행(MDB) AI 협력센터*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개도국의 AX 지원을 위한 시그니처 AI 프로젝트 발굴 지원

* WB('25.12월 既 개소) 外 ADB·IDB·EBRD·CABEI의 AI 사무소 국내 설립 준비 중

【 **순주기 데이터 경제 활성화** 】

- (수집·연계)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해 국가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확보·활용 플랫폼 구축 추진(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26.下)
- (활용)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의료 분야)·확산 및 공공·민간 AI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26.下~)

* 참여자 간 수익배분, 접근범위 등 합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분야별 데이터 공유·활용

** 現 AI Hub(14대 분야, 945종 개방)를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관리·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개편

-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의 활용 혁신방안** 마련 등 AI 데이터 활용 활성화('26.下)

* AI학습목적 저작물 이용제공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 저작권 배상 정책보험 출시·가입지원 추진('27년~) 등

** 가명처리 지원 지역거점 확대, 위험도별 가명처리 절차 차등화, AI 특례 도입·운영 등

3 **피지컬 AI, AX 가속화 등을 통한 대체불가 국가전략산업 육성**

【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

- 범부처 피지컬 AI 데이터 집적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27년~) 등 총력적 합성·실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물리세계를 인식·판단하고 자율 동작하는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범용 월드모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26년~)
- 제조·돌봄·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피지컬 AI 적용 수요를 발굴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대규모 실증·확산 프로젝트 추진

○ (선도분야) 산-학-연 연합 통해 피지컬 AI 7대 선도분야 지원 강화

선도분야	주요 지원 내용
① AI 팩토리	- 제조명장과 청년 시스타트업을 연계, 10대 제조암묵지의 데이터화 및 AI솔루션화 추진 - 제조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풀스택 AI 팩토리 핵심기술 개발 - 피지컬AI 선도모델 ‘스마트 로봇팩토리(Biz.AX)’, ‘제조AI 24’ 구축으로 중소제조 확산
② AI 로봇	- 제조현장 휴머노이드 실증 투입 확대(‘25년 7개 → ’26년 30개(누적)) - AI 로봇 글로벌 3강 도약 위한 로봇 클러스터·파운드리 구축, 국산 로봇 보급 확대, 핵심부품(액추에이터, 센서, 로봇손 등) 전용 R&D 신설 등 추진
③ AI 자동차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26년 200대) 및 추후 다수지역 확산(총 3,000대 투입 목표)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확보 및 학습 플랫폼 구축
④ AI 선박	무인항해·기관자동화·원격운용·검인증 등 완전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본격 착수(‘26.11월)
⑤ AI 가전	혼류생산 제조 AI 개발 및 핵심 모듈 개발, 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운영(‘26.7월~)
⑥ AI 드론	5대 분야(소방·항공·농업·시설관리·물류) 드론 개발,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신설
⑦ AI 반도체	- K-AI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 구축을 통한 피지컬 AI 분야 국산 NPU 레퍼런스 창출 - 자동차·IoT·로봇·방산 K-온디바이스 R&D 컨소시엄별 로드맵 발표(∼’30년, 10개 개발 추진)

【 AI 로봇 글로벌 3강 도약 】

- (개발·확산) ‘28년 상용화 목표로 10대 산업* 특화 AI로봇을 개발하고, 年 1천개 현장보급을 통해 제조 AX 가속화

* 디스플레이, 조선, 가전, 화학, 물류, 병원, 호텔 등

- (기술·데이터) 3대 취약부품(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 전용 R&D 신설 및 주력 10대 업종에 특화된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로봇 행동데이터 수집·실증을 위한 산업 특화 데이터 팩토리 및 피지컬 AI 트레이닝 센터 구축(‘27년~)
- (양산) 로봇 파운드리 구축(새만금), 실증 테스트필드 구축, 車 부품 업체의 로봇산업 전환 지원(대경권) 등 지역 중심 양산체계 구축 추진

【 AX 가속화 및 AI 역량 강화 】

- (범용 AI 모델) 글로벌 Top10 수준(목표) 독자 AI 모델 확보·활용(∼’26년) 및 정예팀 집중지원으로 글로벌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27년)

○ (공공AX) 소규모 AX 지원 패스트트랙* 신규 도입('27년)

* 기술검증(PoC) → 정보화전략계획(ISP) 면제(50억원 미만) → 본사업 추진여부 신속 심의 → 개발실증비 지원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서비스를 순차 개시(~'27.上)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X 서비스** 현장실증 추진('26년, 600억원)

* 국세정보 상담사,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아동청소년 위기대응, 국가 AI 유산 해설사 등 4개는 연내 개시

** 복지 안내 AI 솔루션, AI 농기계 안전운행 서비스, 특허정보 제공 Agent 서비스 등

-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 추진* 및 '공공 AI 사업지원센터'를 통한 사업 쏠과정 지원

* (대국민 서비스혁신) 통합민원플랫폼(AI 정부24·AI 국민비서) 등 12개,

(행정 효율화) 지능형 공공조달 등 11개, (재난안전) AI 대기오염 분석 등 7개

○ (모두의 AI) AI 챗봇 등 쏠국민이 쉽고 부담 없이 쓰는 AI 출시('26.下)

- 공공·민간의 AI 교육 콘텐츠를 연계한 AI 교육 통합포털(모두의 AI 배움터) 및 온·오프라인 AI 실습환경* 구축·운영('26.3분기)

* (온라인 모두의 AI 실험실) AI 서비스 제작에 필요한 클라우드, API, 데이터, 개발환경, 창업연계 지원 등 (오프라인 모두의 AI 라운지) 전국 5개 권역별 AI 교육실습, 개발, 전문가 코칭 지원

- 초·중·고·대학생, 청년 등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AI 교육* 지원, 쏠국민 AI 경진대회 통해 AI 활용문화 확산 및 사업화** 연계(~'27.12월)

* 대학 AI 기본교육(대학), 지식배움터(소상공인), STEP(구직·재직자), AI디지털배움터(취약계층) 등

** AI 기술서비스 개발 시 '국내 AI 트랙' 별도 운영, '모두의 창업' 연계 지원(중기부)

○ (AI 사이버 보안주권) AI發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보안 특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제로트러스트 확산 지원

- AI-양자 기술발전으로 고조된 암호체계 무력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중심 방어체계 전환 지원 추진

※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 투자여건 조성 및 애로 해소 등 '**국가 총력 지원체계***' 본격 가동

* 대통령 주재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및 혁신지원단 운영, 전력·부지·인허가 신속 지원 등

【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가속화 】

-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
 - (센서) 전략적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기술개발 및 수요산업 현장 실증 기반 상용화 R&D 기획
 - * (예) 휴머노이드 핸드용 촉각 센서를 센서에서 데이터를 직접 선별 처리하는 온-센서로 기술 개발
 - (액추에이터) 로봇부품 전용 R&D를 신설해 AI 로봇에 특화된 고성능·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부품 실증* 지원
 - * 부품 기업이 개발한 액추에이터 부품을 로봇 기업 플랫폼에 탑재하여 성능·내구성 등 검증
 -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고성능 배터리 기술개발 및 육상 구동환경 기반 전주기 실증* 지원 추진('27년~)
 - * 상용·차세대 배터리 활용한 휴머노이드용 배터리 개발 → 로봇 등 수요기업이 주도적 성능 검증
- K-뷰티, K-콘텐츠 등 기존 선도 프로젝트별 성과 창출 노력 지속

프로젝트	주요 내용
① 차세대 전력반도체	· 수요연계형 R&D 사업 기획 및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수요 창출 확대
② 그래핀	· 차세대 2차원 소재 R&D 사업 기획, 수요-공급기업 매칭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③ SMR	· i-SMR 상용화 기술개발 및 차세대 해양용 용융염 원자로(MSR) 원천기술 집중 투자
④ 스마트 농·수산업	· 선도지구(농업무안군, 수산업 고령군) 조성 및 국가 농·어업AX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⑤ K-콘텐츠	· 국산 스마트TV의 글로벌 K-FAST 채널에 양질의 K-콘텐츠 판권 수급 및 AI 더빙 지원
⑥ K-뷰티	· 맞춤형 뷰티 기술 상용화 기획 및 체험·소비가 결합된 관광·수출 통합 클러스터 조성
⑦ K-식품	· 전략품목 육성, 할랄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K-이니셔티브 연계 홍보 등 수출 지원

【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진입 】

- (기술)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 수립('26.4분기)
- (데이터) 바이오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개방('26.11월) 및 여러 기관에 흩어진 건강검진 데이터를 표준화·연계*
 - * 검진 데이터를 생활습관, 유전요인과 결합하여 국민체감형 AI기반 서비스 제공 등
- (창업) AI 등 신기술 기반 창업, 스케일업·글로벌 진출 지원 등 창업 지원체계 구축 위한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방안 마련('26.9월)

【 방산 4대강국 구현 】

- (기술) 한국형 인큐텔(IQT) 신설 및 군 시설 기반 실증지원을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정부-기업 간 기술IP 공동소유 허용(예외적 제한 可)

- (조달) 2~3년 내 개발-시제 제작-실증까지 연계하는 신속시범사업 확대*,
국방·방산 공모형 획득 및 진화적 애자일(agile) 방식 전환** 등 절차 신속화

* (예) AI 기반 대드론 통합방호플랫폼 구축 등

** 스타트업 참여 확대, 군이 군사적 필요성 제기하고 민간이 솔루션 제시, 짧은 주기 실증·평가·개발 반복

【 우주·항공, AI 에이전트 등 미래 프론티어 산업 】

- 민·관협업 달 착륙선 조기 발사('30년), 저궤도 위성통신망 완성('35년) 및 남해안 산업벨트 육성 등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이행 추진

- K-우주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기 개발 등 본격 추진

- AI 에이전트, 양자·보안 등 전략산업의 차세대 성장기반이 될 선도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26.4월 출범한 전략경제자문단 제안을 사업화)

프로젝트	주요 내용
① AI 에이전트	▶ AI 에이전트의 안전성, 상호운용성 검증을 위한 오픈랩* 구축 및 발주·입찰·심사·관리 등 조달 단계별 AI 에이전트 개발 * 결제·예약·계약·개인정보 처리 등 고위험 행위 시나리오를 테스트베드에서 재현·검증
② 양자·보안	▶ 통계데이터센터에 양자안전 동형암호* 기술 시범도입 및 실증 운용 *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분석·연산 → 민감정보 보호에 유리한 보안기술
③ 광반도체	▶ 실리콘 포토닉스* 및 패키징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 전기 대신 빛을 이용해 초고속저전력저발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 AI 에이전트의 상품 검색, 주문, 결제 등 쇼핑全流程 실증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샌드박스 적용 등) 검토

* 관계부처(재경부, 금융위, 공정위, 과기부, 개보위 등) TF 구성 추진

【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

- (블록체인 산업)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형실증사업, 선도기술 확보 등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추진('26.下)

- (국채) 국채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통해 금융인프라 혁신 본격화

- 한은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 추진('27년)

- 한은 CBDC 인프라와 여타 블록체인 간 연계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검토

-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가칭}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26.下)
 -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물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지원
 - (탄소 크레딧) 국제기구(UNFCCC, GGGI) 등과 협력하여 GVC^{*}M* 탄소 크레딧을 생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방안 마련
- *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 R&D 혁신,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육성기반 강화

① R&D 추진체계 고도화, 국가대표 출연연 육성 등 전방위적 R&D 혁신

【 도전형 R&D 전환 및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 (도전형 R&D) 전략기술 분야에 정책 지원 집중
 -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 우선 검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 추진('26.下)
 - 연구데이터·AI 인프라 등 핵심 연구자원*을 결집해 전략기술 분야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K-문샷 프로그램 미션별 로드맵 발표('26.9월)
- * (예) AI활용이 가능한 과학연구 데이터, 과학AI 연구 인프라(슈퍼컴퓨터 6호기 등), 자율실험실 등
- (회수·재투자) '투자형 R&D'를 도입해 출연금 중심 R&D에서 성공 시 지분 가치를 회수하는 출자 방식까지 확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26.下)
 - 기초연구-기술스케일업-실증·사업화-금융·조달로 이어지는 소주기 성과확산을 위한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방안 마련(~'26.下)
 - 프로젝트형 SPC, 연구개발 투자조합 등 민관 공동 투자모델을 활용해 딥테크·전략기술 기업의 대형 R&D와 사업화·스케일업 지원

【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

- (연구체계)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 국가난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한 출연연 R&D 사업 고도화 방안 마련(~'26.下)
 - (연구환경) 연구혁신비* 현장 확산, 공통행정업무(감사, 채용, 홍보 등) 통합·전문화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
- * 직접비(인건비, 시설장비비 등 경직성 비용 제외) 중 10% 내에서 최소증빙으로 자율적으로 사용

2 국부펀드·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첨단기술 민관자금 지원 확대

- (국부펀드)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 추진(∼'26년)
 - (재원 및 수익활용) 재원은 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
 - (투자대상·방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 등 추진
- * ①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전략산업(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 ②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 ③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 (방화벽)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
 - *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방화벽(Chinese Wall) 필수
-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추가 출시(6,000억원, '26.3분기), 하반기 15조원 이상 자금 지원(사업승인·자펀드결성 포함) 목표로 운용
 - 특히, 민관자금이 초혁신기업에 신속·유연히 투입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부문에 ^{가칭}초혁신경제펀드 조성 추진('27년)
- (첨단기술 보험)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7년)
 -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관련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축적*하고 첨단제품·서비스 보험체계 통합·구축방안 검토

* 실증특례 보험 지원 사업의 사고 데이터도 보험개발원에 축적

◇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지방창업 촉진 등을 통한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

【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국토대전환 】

- (5극3특) 지역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26.3분기)
- 선정된 산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기반(인재·인프라)의 3축 7대 패키지 종합지원

- ① (재정) 투자규모 비례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지투·외투·유턴 투자지원금 지원 시 우대 추진
- ② (금융)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투자
- ③ (세제)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기회발전특구 등 활용) 지원, 근로자 세제지원 시 지방 우대
- ④ (규제)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광역단위 규제 해소로 지역 혁신 촉진
- ⑤ (기술) 성장엔진 R&D, 제조AX 생태계 등 지역 주도의 기술개발·AX 확대
- ⑥ (인재)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신설 등
- ⑦ (인프라) 첨단국가산단, 제조AX 클러스터 등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 (메가특구)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광범위한 규제특례 및 패키지 지원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 (규제자유특구) 복수 이상 지자체를 연계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2개, '26.8월) 및 사업화·R&D 자금 등 지원 추진

【 지역 혁신을 위한 R&D 활성화 】

- 실증·사업화까지 쏠주기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이 스스로 역량을 분석하고, 중점분야를 선정해 기획·추진하는 지역자율 R&D를 신설하고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26.下~)
 - *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세부과제 기획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
 -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딥테크 창업·사업화 거점으로 활용하여 지역 R&D의 기술고도화, 글로벌 실증 등 사업화 지원('26.下~)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시 우선허용 및 신속처리(5→2개월)('26.下)

【 지방창업 촉진 】

- (창업도시)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 개시 및 6곳 추가 지정('26.下)

* 4대 과기원 소재지 우선 지정 :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 ▶ (R&D 및 실증) TIPS 지원 확대(지역 50% 우선할당) 및 지역 연구기관 실증 지원
- ▶ (투자)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최대 4억원 지원, 지역성장펀드(모펀드) 2조원 조성(~'30년)
- ▶ (인프라) '30년까지 스타트업파크 2곳(총 10곳), 엔젤투자허브 10곳(총 14곳) 추가 구축
- ▶ (제도) 창업 휴직 제한기간 연장(3년 → 최대 7년) 및 휴학 제한(4년) 폐지

- (창업·벤처투자)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손실위험 완화 및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손실위험 완화) 지역성장펀드 민간출자자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 확대(10 → 15%)
(세제 지원)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를 상향(신주 투자액의 5 → 7%)

- (모두의 지역상권) 로컬 창업기업을 지역별 핵심포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 조성(~'30년)

* (LIPS 프로그램 확대) 민간투자 유치 기업 매칭 용자(최대 5억원) 및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지원
(AI 3종 서비스) AI 도우미(상권분석·노무세무), AI 네비게이션(메뉴가격 등 컨설팅), AI 교육(업종별 교육)

【 지역투자 확대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 (건설) 지방 건설경기 보강 및 청·관사 노후화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조달자금을 활용**한 청·관사 복합개발 대폭 확대 추진

* 전체 7,547개소 청·관사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경과한 건물 2,119개소(28.1%) 해당('25년 기준)

** 캠프코 현물출자를 전제로 캠프코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복합개발 추진

-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26.下) 및 지역경제, 돌봄, 인구감소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 위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 (청년 일경험) 미취업청년 대상 사회연대경제기업 일경험 기회 제공(2,000명, '26년)
(마을기업) 지역자원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기여(53억원, '26년)

【 공공기관 지방이전 】

-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26.下)하고 '27년부터 선도기관 중심 이전 착수

-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 등과 연계한 집적배치 원칙을 감안해 이전계획 수립

◇ 지역활력 제고 및 정주·이동·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생활여건 강화

【 지방소비 및 지방관광 활성화 】

- (지방소비) 지방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의 지역화폐 전환방안 검토
 - 법인기부 도입 등 참여기반 확대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우선 적용 등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마련('26.12월)
- (지방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7개군 추가지급(10→17개군, '26.8월) 및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협력 모델 발굴
 - * 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지급
- (관광새마을운동) 주민·사업체 등의 참여를 통한 관광인식 개선, 관광자원 발굴 등을 위한 지역관광 거버넌스* 확대 추진('26년 13개)
 - * (구성) 관광두레(문체부), 협동조합,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역지회, 마을기업, 지역관광 종사자 등 (역할) 전국 기초단위 거버넌스 중심 친절·환대 캠페인, 관광활동가 육성, 관광자원 발굴 등
- (지역관광)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50%(최대 10만원)를 지원하는 반값여행 지역 확대('26.7월, 4→14개) 및 숙박할인권 10만장* 배포
 - * 비수도권 7만장(3만원·2만원권), 연박 1만장(7만원·5만원권), 섬 2만장(5만원·3만원권)
- 방한관광객 교통편의 제고 위한 지역관광지 순환형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통합관광패스 4만장 시범 운영('26.10월)

【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체계 구축 】

- (정주여건)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완결성 있는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역별 생활권 구축
 - ▶ (주거) 지방이전 근로자 등 정착지원을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 (문화) 거점문화시설, 문화선도산단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 ▶ (교육) 과학고·자공고 등 정원 확대·설립 지원, 이전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및 자녀 입학특례 지원
 - ▶ (의료) 의료인력·시설장비·진료협력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교통) 지역 경제성장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및 중장기 인프라 계획** 수립('26.下)
 - * 함양·창녕, 광주·강진 고속도로 개통('26.12월), 태화강~북울산 광역철도 개통('26.下) 등
 - **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26~'35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년) 등
- 철도 등 대체 대중교통이 없는 노선 위주로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을 지정해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 및 관광 접근성 제고('27년)

【 지방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

- 지방 일자리정책 추진체계를 지방 주도 - 중앙 지원으로 전환하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6.下)
 - * 지자체장 주도 지역거버넌스 강화, 광역단위 일자리사업 지원조직 설치, 지역일자리 사업평가 체계화 등
- 5극3특 권역 단위 공유대학 구축(1,200억원, '26.9월) 및 초광역 단위 지방정부-기업-대학 협업 인재육성 우수모델 지원(800억원, '26.9월)
 - 거점국립대(3개소)에 지역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산학연 협력 기반 융합연구원 구축, AI 거점대학 전환 등 패키지 지원('26.3분기)

◇ 재정·세제·공공조달 지방 우대를 통한 지방성장기반 마련

- (재정) '27년 지방우대 사업* 수를 금년(7개) 대비 대폭 확대
 - * (현행)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총 7개 사업
 -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하고 부처별 지방우대 사업 발굴('26.下)
 - *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하여 설계
- (세제) 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
 - (기업)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생산적 활동(R&D·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개편 (예: 기본 세액공제율 × 지역별 계수)
 -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하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 * (일반)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
 - (창업)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확대
- (공공조달)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26.9월)하고 입법·제도화 추진(12월)
 - * (예) 인구감소지역 기업 가격평가 우대, 지방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 등

3. 구조적 문제 대응

- ◇ 청년, 中企,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으로 AI 대전환기 양극화를 극복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금융·공공·재정·세제 등 구조혁신 본격 착수

1 양극화 극복

- ◇ AI發 고용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추진

- 산업전환 흐름을 신속 포착하기 위해 산업전환 일자리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직무별 AI 영향 분석한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 개발

* 고용정보원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를 개편·확대(산업데이터 모니터링, 직업직무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등)

- 맞춤형 AI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전환역량 강화

- ▶ (청년) 첨단디지털 작업훈련 확대(4.9→5.4만명), AI 엔지니어 양성 위한 KDT AI 캠퍼스(41개소) 운영(26.下)
- ▶ (中企) AI 훈련코치가 진단·처방, AI훈련 확산센터의 맞춤형 훈련 제공 등 쏠주기 밀착지원
- ▶ (지역) 폴리텍 피지컬 AI 테스트베드(4개소) 구축, 지역中企 등에 순차 개방(26.4분기)

- 전환 충격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지정·지원하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확대**

* 지역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전직·재취업 지원, 지역 신산업 육성, 전환지원센터 운영 등

** 전환으로 일시적 휴업 불가피한 기업은 매출액 요건 완화, 채용장려금 신청 패스트트랙 도입 등

- ◇ 일자리, 자산, 주거, 결혼·출산 등 문제해결형 지원으로 청년도약 뒷받침

【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

- (인력양성) 3대 메가 프로젝트, 첨단산업 등 부문의 청년 전문인력 20만명+a 양성(~30년)하고, 취·창업 연계 지원

-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수요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후속관리 강화
-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모든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 신설

* (예) K-뉴딜 아카데미 등에서 Agentic AI 교육을 받으면 중소중견기업 등 수요와 연계하는 취창업 플랫폼

- 자격·교육·경력 등 직무능력 外 프리랜서 등 경력정보까지 포함해 원클릭 이력인정서를 발급·제공하는 ^{가칭}커리어뱅크 구축

-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확대, 청년형 공공일자리 발굴 통해 20만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30년)
 - (민간)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각 부문별 일자리, 창업, 인턴십 등 민간취업 확대(10만명)
 - (공공) 채용연계 일경험을 확대하고, 공공가치 창출 및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발굴(10만명)
- (단계별 지원)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지원
 - (구직)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취업 도전 청년' 중심 개편
 - (채용·입직) 청년고용 인센티브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
 - ▶ (재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규모 확대, 재정사업 지원 시 청년고용 연계 인센티브 강화
 - ▶ (세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 ▶ (금융) 청년창업자,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방안 마련
 - (성장)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 우대지원

※ 상기 내용을 포함한 ^{가칭}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마련·발표('26.3분기)

【 자산 형성 지원 및 생계비 부담 경감 】

- (자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납입금 소득공제 10% 적용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ISA 출시('27.上)
 -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연계방안 마련('26.下)
- (주거)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 높은 新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도 신속공급
 -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소득요건(年 5천만원) 완화
- (문화) 비수도권 청년(19~20세)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단가를 확대(15→20만원, 지방비 포함)하고 지원분야를 도서까지 확장('26.8월)

【 결혼·출산 페널티 개선 】

- (정책대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개선방안 수립('26.下)

- (주거)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거주 중인 청년 결혼 시에도 계약 연장 허용**

* (현행) 혼인신고 7년 도과 시 기회상실 → (개선) 출산가구(만2세↓) 대상 일정비율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현행)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 초과시 퇴거 → (개선)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한도)

- (차량) 혼인신고로 1세대가 경차 2대 소유 시 1대 유류세 환급 허용

※ 청년정책을 체계적 수립·추진하기 위한 **청년정책 거버넌스 검토**

◇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부문별 성장과 재기 지원

①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는 국가창업시대 구현

- (모두의 창업) 대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창업가 '26년 1.5만명(1차5천명 + 2차1만명), '27년 사업 확대 추진

* (초기 멘토링) 창업활동자금(2백만원) → (지역·권역 오디션)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협약 보증 등 → (대국민 경연)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창업열풍펀드 조성(500억원 규모) → (우승자) 상금+투자 10억원

- 청년의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모두의 아이디어(지재처)', 'AI 경진대회(과기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한 혁신 인재를 '모두의 창업'에 연계('27년~)

- (IP 활용·투자)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국가 자산으로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거래·사업화·보상까지 연계하는 활용체계 구축 추진

- 핵심 해외특허를 확보해 특허풀로 묶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송합의·배상금, 실시료 등 수익을 창출하는 IP투자펀드 조성 확대('27년~)

- (딥테크 육성) 4대 과기원 및 연구개발특구 중심 딥테크 창업 활성화 및 기후테크 등 분야별 혁신기업 육성방안 마련(~'26.下)

* (4대 과기원) 창업원 신설(1→4개소 '26년) → 창업리그, AI 1인창업 지원 등 소주기 창업지원 확대 (연구개발특구) 특구 퍼스트 딥 펀드(200억원 '26년), 스케일업 펀드(1,000억원 '27년) 등 전용펀드 신설

② 성장 중심 지원, 상생 확산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투자·성장 촉진

- (성장촉진형 지원) 중소기업의 투자·성장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재정 및 규제 등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26.下)
 - (세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시 특별세액감면 및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 신설
 - (재정) ①고속성장, ②성장유지, ③성장정체, ④성장하락 등 성장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속성장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재설계
 - 성장성·잠재력 갖춘 기업* 중심으로 中企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시범사업('26.下 3개 사업)을 거쳐 '27년부터 범부처 확산
 - * 성장성 3년 매출 또는 고용증가율 5% 이상, 잠재력 AI 기업평가(K-TOP, KOGPS) 상위 30% 이상 중 1개 이상 충족 시
 -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 선정 후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확대('27년)
 - (규제) 투자·성장 저해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 발굴 및 전면 재검토
- (재도약) 전체 중소기업 대상 AI 활용 위기징후 선제포착 시스템 구축을 추진(~'27년)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반영
- (불공정거래 근절)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26.12월)하고 직권조사, 과징금*, 시정명령 도입·강화 등으로 기술탈취 근절
 - * 부정경쟁방지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과징금 도입, 하도급법 과징금 한도 상향(현행 20억→개선 100억) 추진

③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위기 극복 지원

- (생활형 R&D) 유망 소상공인 아이디어를 시장성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패키지(생활문화혁신) 지원(400억원, '26년)
- 역사·문화적 상징성 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맞춤형 상권 지원 병행
 - * 백년시장(10곳, 최대 30억원 지원), 유망골목상권(50곳, 최대 5억원 지원) 등
- (위기 극복)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사전 포착해 부실 확대 전 맞춤형 정책안내 및 경영진단, 멘토링 등 지원(246억원, '26년)
 - * (현행)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폐업 이후 재창업 등 사후지원 (개선) 신용하락 등 부실징후 소상공인 사전 선별, '위기알림톡 발송', 정책 사전안내

④ 근로유인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 매트릭스 강화

- (근로유인 제고)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 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EITC 소득요건 완화 등 기준 합리화 방안 발표(‘26.7월)
- (사각지대 해소)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해 단시간·저소득 노동자의 가입 확대(‘27년)
 - 장애인 고용 부담금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26.下)하고,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 확대(3→6개월분, ‘26.8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現 기준중위소득 32%) 단계적 상향,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26.10월)
 - 근로능력 등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시범 추진(‘26.7월)
 - * 경제적 자활(취·창업)/사회적 자활(자활의자·사회통합 등) 목표 구분, 개인별 역량에 따른 사업단 배치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고용·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26.下)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 검토
- 공공부문별 초기업 교섭모델 개발 위한 연구용역 추진(~‘26.11월),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초기업 교섭모델 민간 확산 지원
- 야간노동 규모·유형 등 상세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노사정이 함께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26.下)

【 고용·근로시간 제도 개선 】

- (기간제) 공공부문 기간제 처우개선* 및 기간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 논의 착수(‘26.下)
 - * 적정임금 설정(최저임금의 118%), 1년 미만 기간제 대상 공정수당(월 기준금액 10~8.5%) 도입(‘27년)
- (근로시간) 사회적 논의 바탕으로 AI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근무방식 확산* 지원
 - * (예) 「워라벨+4.5프로젝트」 사업 확대, AI로 인한 근로방식 변화 등 연구용역 추진

◇ 자본시장 체질 개선, 부동산 - 금융 절연 등을 통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 자본시장 체질 개선 】

- (생산적 금융 확산)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및 외국인 통합계좌의 ETF 투자 허용 등 국내증시 수요 확대
 - 시장이 자체적으로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생산적 금융 실적을 기재한 Fact book 작성·공개
- (기업가치 제고)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검토
 - * (현행)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기준일(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
 - 저PBR 기업 명단을 선정·공표(1차 '26.11월)하고, 기업이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 일정기간 공표 면제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 등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점검하고 이를 주주활동과 적극 연계
- (코스닥 역동성 제고) 세그먼트별 기준·혜택 등을 담은 코스닥 승강제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27년초부터 시행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강화* 및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 추가 확대**('26.下) 등 혁신기업 원활한 상장 지원
 - * 소액공모 한도확대(10→30억원), VC펀드 공모규제 완화 등(7월중)
 - ** (현행) 7개 분야(바이오, AI, 우주, 에너지, 로봇, IT보안, K-콘텐츠) → (개선) 3개 분야 추가 선정
 -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본격 시행('26.下)하고,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코스닥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우수 코스닥 기업 지원
 - * 코스닥 주목적 자펀드 조성, 국민참여펀드 통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투자(최초설정액의 10% 이상) 등
- (투자자 편의 제고) 현재 이틀(T+2일) 소요되는 주식대금 결제주기를 하루(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 마련(~'26.10월)

【 부동산 - 금융 절연 】

- (시중대출)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DSR 적용 대상 점진적 확대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및 규제 사각지대 해소
 -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부담 강화, 자본 추가 적립의무 부과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대출) 소득요건 개편을 통해 지원요건을 합리화*하고 부동산 정책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총량 관리 강화
 - * (예) 물가·가구원 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
- 시중금리 상승기 기금대출 쏠림 방지 위해 은행 자체주담대와 기금대출 금리 간 적정 금리차가 유지되도록 금리변동 유연화
- (정책보증) 무주택청년·취약계층 외에는 보증비율(現 수도권·규제^{*}80%, 기타90%)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전세대출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제공 확대 등 청년·취약계층 보증가입 전후 보호조치 강화
 - *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요건(전세가율) 단계적 하향, 사고율 반영한 보증료율 조정 검토

【 원화 국제화 】

- (인프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26.7월}, 가칭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운영^{'27.1월}과 함께 자본거래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
- (수요) 단기 금융상품 등 외국인의 원화 운용범위 확대, 원화 사용 경상거래 시 인센티브(수출금융 금리 우대, 무역보험 한도 상향 등) 제공
- (공급) 외국계 금융기관 차입제한 완화 등 증권 결제 시 유동성 확보 수단 제공,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원화 무역금융 활성화
- (리스크 관리) 원화 국제화 추진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24시간 대응체계 강화, 역외 원화 유동성 관리 및 대외안전판 확충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26.7월~)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와의 정례소통 강화로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환경 개선

【 전략적 국부 운용 강화 】

- (K-Asset 프로젝트) 국부관리 패러다임을 소유·보존 → 운용·가치 창출로 전환하고 신유형 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 * (현행) 부동산 중심의 관리, 부처·회계간 분절적 관리, 가상자산 등 사각지대 존재 → (개선) '국가자산 개념' 확대·재정의, 컨트롤타워(재경부) 기능 강화, 자산군별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간 자산정보 연계(dBrain) 및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가칭 K-Asset Cloud) 단계적 구축
 - * ① 국가자산外 지방·공공기관 자산정보 dBrain 연계, 행정망 내 AI(국유재산법률해석 챗봇 등) 도입('26년)
 - ② 핵심자산 발굴·최적 활용을 위해 기존 dBrain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용 DB 구축('27년중 ISP 수립 추진)
- (해외청사 개발) 부처별 분산된 해외청사 사업*을 통합해 복합개발**하고 지역별 수요·복합개발 필요성 감안한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 * 재외공관 통합청사(외교부), 코리아센터(문체부), K-마루(재경부) 등
 - ** (멕시코시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 (뉴욕·하노이) 사업부지 확보 추진 중
- (국고금 관리) 국고금 배정체계를 부처별 총액배정 방식에서 핵심사업별*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여 핵심사업 중심으로 철저한 집행 관리
 - * 재난안전, 국정과제, 의무지출, R&D 등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주요 정책사업
- 자금배정부터 집행까지 쏙 주기를 지원하는 전용 AI 도입 추진
 - * (예) 평균 집행액 대비 과도한 규모의 지출 발생 등 자금집행 이상징후 탐지, 일별 국고금 지출소요 예측 등
- (국채시장)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직접투자 허용 및 WGBI 상시점검 체계를 통한 자금유입 점검
 - * 본인 납입금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13.2~16.5%, 연 9백만원限) + 연금수령시 저율 분리과세(3.3~5.5%, 연 1,500만원限) 적용 중

【 재정과 연계한 세제개혁 】

- (조세지출)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정책환경에 맞게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 전환 등 획기적 정비
- (가업상속) 상속세 회피 방지 등을 위해 대상업종 조정, 대상선정 심사위원회 신설, 공제요건 합리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

【 재정운용 효율화 등 재정혁신 】

- (지출구조조정) '27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역대 최고 수준 지출구조조정,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26.下)
- (교육재정교부금)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편중돼 있는 교부금 개편방안 마련
*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 및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를 자동 배분
- (현금성지원 개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출생 직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현행) 신청월부터 지급(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 (개선) 출생월부터 지급
- (재정구조 개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특세 등 목적세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정비방안 마련

【 공공기관 기능개혁 】

- 핵심 공공기관 전략적 구조조정,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26.3분기~)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5개社) 통합 등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을 위한 유사·중복기관 통합
 - 코레일 자회사(5개社) 통합 등 분절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폐합으로 비용 절감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 혁신 조달생태계 구현 】

- (혁신촉진형 계약제도) 규격화된 전통적 구매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술 획득에 적합한 구매절차*(한국형 OTA) 신설('26.12월)
* ①(개방) 정부 제안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격 완성, ②(성과) 최종결과물 → 단계별 목표 달성(milestone)시 비용 지급, ③(유연) 변경 제한 → 계약금액·요구성능 등 탄력 변경
- (혁신제품 제도 개편) 로봇 등 신산업분야 실증연계형 패스트트랙*을 확산하고, 지역현장 수요 및 혁신기술 발굴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정주체로 추가**
* 정부·공공기관이 R&D 결과를 직접 기술 실증하여 혁신제품으로 연계
** (현행) 중앙관서의 장(17개) → (추가) 광역지자체의 장(서울시·경기도 시범사업 예정)

◇ 인구감소 대응 및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 양육 부담 완화 】

- (아동수당)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등 추가 지원**
* ('25) 8세미만 → ('26) 9세미만 → ('27) 10세미만 / ** 비수도권 +0.5만원, 인구감소지역 1~3만원
- (돌봄여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 합리화* 및 가정양육 영아에 대한 시간제 보육 지원 강화('26.下)
* 설치의무 기준 세대수 범위 합리화(現 500세대), 소규모 분원설치 허용 / ** 다자녀 동시예약 도입
-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 다자녀 가정 우선입학 확대(3자녀→2자녀)
* (현행) 시도별 다자녀 기준 상이(2~3자녀) → (개선) 시도협의회 등 거쳐 다자녀 기준 2자녀로 확대

【 외국인력 확대 】

- (로드맵) 도입 - 능력개발 - 노동조건 보호 - 이직 등 외국인력 고용
주 과정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26.下)
* (예) 수급설계 체계화, 외국인 취업현황 DB 구축, 고용허가제 개선, 정주여건 개선 지원 등
-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F-2-T) 적용대상* 및 K-Star 트랙 지정대학
확대(5→32개)를 통해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정주 목표(~'30년)
* (현행)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취업자만 허용 → (개선) 과학기술분야 교수연구인력까지 확대

【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

- 지방 사립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으로 학과구조 개편 등을 통해
특성화할 수 있도록 5년간 집중지원('26년 15개교 내외 선정, 총 850억원)
-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으로 대학 간 역할·기능 조정도 활성화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대학 간 이동교원 공개채용 예외적용 및 정년 완화, 가자재 교환 허용 등
** 정원 감축기준 완화(3→2%), 사업비 배분 시 추가 배정(20%) 등

◇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 (기초연금) 소득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26년 월 35만원) 추가 지원 등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집중지원제도로 개편 추진
- (국민연금) 청년 대상 첫 국민연금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원) 지원 도입,
군 크레딧 확대(12개월 → 복무기간 전체) 등 청년층 지원 강화('27년~)
- 고령층 소득·소비여건, 경제·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장기 지속가능성 강화 과제 지속 발굴

- (퇴직연금) 소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운용체계 개선 등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26.下)

- ▶ (의무화) 실태조사(~’26.7월)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마련(’26.8월)
- ▶ (기금형) ①금용기관 개방형, ②연합형, ③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제도안 마련(’26.8월), 연내 입법 추진
- ▶ (운용체계) 계약형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디폴트 옵션 고도화, 사업자평가 개선 등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26.8월)
- ▶ (사각지대) 특고·플랫폼 등 노무제공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임의가입을 허용(’26.7월), 1년미만, 특고·플랫폼 등 취약노동자 적용 위한 사회적 대화 지속(경사노위, ’26.6월~)

- (주택연금) 취약고령층 지원 확대*, 가입자 편의성 제고** 등 시행하고 지방가입자 우대 등 주택연금 활성화 과제 지속 발굴

*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대형 가입자의 수령액 우대 폭 확대(기존+9.3만원 → 개편+12.4만원)

**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가입 허용

◇ 형벌 및 산업·기술별 규제, 규제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 합리화

- (형벌) 관계부처 합동 TF(재경부·법무부·법제처 공동)를 통해 행정·경제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전수조사·일제정비*를 주도해 2년내 성과 창출

* (현행) 하향식으로 정비기준 제시 → 각부처 소관 과제 발굴 → 법무부·법제처 법리검토 (개선)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신설)에서 모든 형벌 규정을 원점 검토 후 일괄정비 추진

- (산업·기술규제) 낡은 규제 현실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정

- ▶ (핵심산업) 주요국 대비 불리한 규제는 필요성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개선 또는 폐지(’26.下)
- ▶ (신산업) ‘드론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 발표(’26.下)
- ▶ (서비스업) 융복합 신산업 지원 위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26.下)
- ▶ (경쟁제한적)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산업 및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분야의 규제 합리화

-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 제정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증 과제 대상 특례 만료 전 선제적 규제정비 추진(’26.下)

* 쟁점과제 조정기제 강화, 소주기 관리 등으로 개별 규제샌드박스(6개 부처, 8개 분야) 관리체계 강화

◇ 안전 사각지대 축소, 안전관리 책임·제재 강화 등 안전한 국가 구현

【 안전 사각지대 축소 】

- (화재) 대규모 실태조사에 기반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공장·창고 화재안전 강화방안 마련(‘26.3분기)
 - 전국 19만동+a 공장·창고 대상 관계부처 합동 대규모 실태조사 실시
 - 공장 내화구조 적용업종 대폭 확대 검토(‘27년) 등 건축·소방·위험물 관련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 총 3조원 규모 정책금융 신속 공급, 디지털·AI 기반 화재예방 R&D 지원 등 기업의 안전투자 관련 재정·금융 등 인센티브 확대
- (특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고 직종 확대(방과후 강사 등) 및 현장 맞춤형 노무제공자 재해 예방사업 지원 확대 추진*
 - * (현행) 안전의식 고취활동, 안전장비 지원 등 2개 유형 → (개선) 폭염한파대비, 건강관리 등까지 확대
- (작은 사업장)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명을 통한 28만회 현장 순찰(‘26년 중) 등 위험요인 지도·지원 추진

【 안전관리 책임 및 제재, 인센티브 강화 】

-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비용·기간 제공 의무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등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26.下)
 - *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등 시공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 (개선)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수과정에 걸쳐 주체별 역할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시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 * 안전보건규칙 위반(떨어짐·끼임 등 사고), 사용·작업중지명령 위반 등 신고시 건당 최대 5백만원 포상
-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 특례 도입(기준내용연수 50% 단축), 첨단 안전기술 활용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27.上)
 - * 연구개발공제율(%): 일반2~25, 신성장·원천기술20~40 / 투자세액공제율(%): 일반1~10, 신성장·원천기술3~12

※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해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 해결방안 지속 강구

【 대외 여건 】

□ 중동전쟁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으나,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

○ (성장) 美-이란 종전 협상 등으로 하방리스크는 다소 완화됐으나,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

- 다만, 국가별 영향은 에너지 수입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부 국가는 AI 관련 투자 등에 힘입어 성장세 확대*

* IMF('26.7월)는 AI 관련 하드웨어 수출국(한국, 대만 등)의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26.7월>)

	전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	신흥국	중국	인도
'25년	3.5	1.9	2.1	1.4	1.1	1.1	4.5	5.0	7.7
'26년 ^e	3.0	1.7	2.3	0.9	0.6	2.6	3.8	4.6	6.4
'27년 ^e	3.4	1.8	2.2	1.2	0.7	2.5	4.5	4.1	6.7

○ (물가) 중동전쟁 영향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겠지만, 정부 대응, 식품·서비스 등 他품목 물가, 고용 상황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

- 국제유가는 4월 전고점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인프라 파괴, 원유 재비축 수요 등으로 정상화까지 상당기간 소요* 가능성

* "중동 에너지 생산·수송 인프라가 크게 훼손된 만큼 회복에는 장기간 필요"(IEA 사무총장, '26.4월)

세계경제 물가상승률 전망(% , OECD<'26.6월>)

	OECD	G20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25년	4.0	3.4	2.6	2.1	3.2	2.1	△0.1	2.0
'26년 ^e	4.3	4.0	3.7	2.8	1.8	2.6	1.5	4.8
'27년 ^e	3.0	3.1	2.1	2.4	2.2	2.2	1.9	4.0

* 글로벌 물가상승률(% , IMF<'26.7월>): ('25)4.1 ('26)4.7 ('27)3.9

○ (금융) 중동전쟁 영향으로 4월초까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기업실적 호조와 예상보다 선방한 세계경제 등으로 점차 완화

【 국내경제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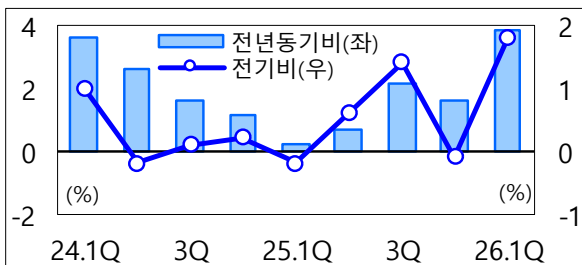
1 경제성장

- ① **[실질GDP]** '26년 **3.0%** 성장 전망 ('27년 **2.2%**)
[경상GDP] '26년 **12.3%** 성장 전망 ('27년 **4.6%**)

【 실질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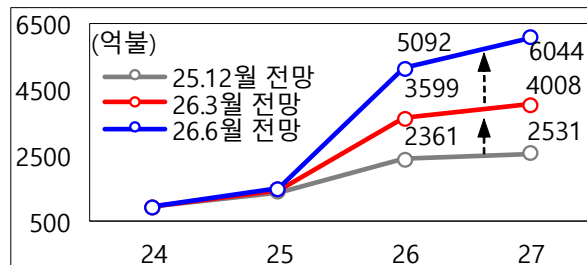
- 반도체 호조세 확대, 정책효과 등으로 '26년 3.0% 성장 전망
 - 2분기는 기저효과, 중동전쟁 영향으로 조정되겠으나, 하반기는 반도체 호조 지속, 전쟁영향 완화 등으로 성장세 재개 예상
- '27년 성장률은 수출 호조가 점차 내수로 확산되며 2.2% 예상

GDP 실질성장률



* 출처: 한국은행

글로벌 D램 매출전망 변화



* 출처: G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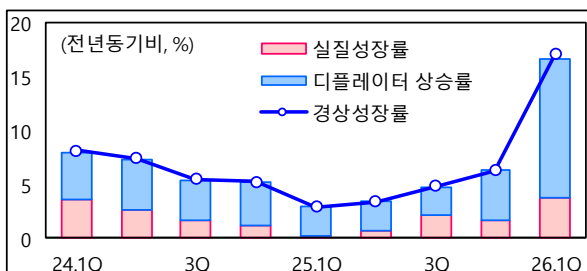
【 경상성장률 】

- 실질성장률 상향 조정, 반도체 등 수출가격 급등(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디플레이터 상승폭 확대에 힘입어 '26년 12.3% 성장 전망

* 경상성장률(%), 당초 → 수정전망: 4.9 → 12.3 [$\text{<실질> } 2.0 \rightarrow 3.0 + \text{<디플레이터> } 2.9 \rightarrow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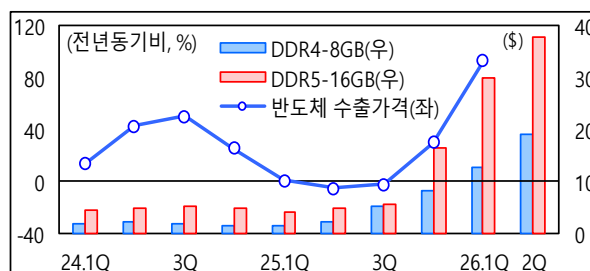
- '27년은 성장세 지속,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4.6% 성장 예상

경상·실질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 출처: 한국은행

반도체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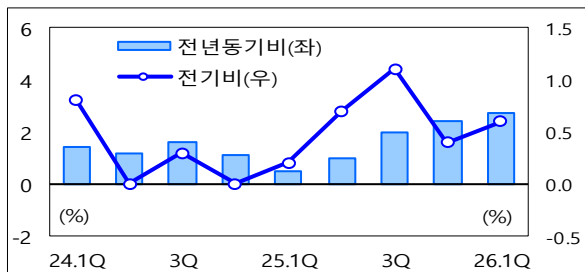


* 출처: Trendforce, 한국은행

② [민간소비] '26년 2.0% 증가 전망 ('27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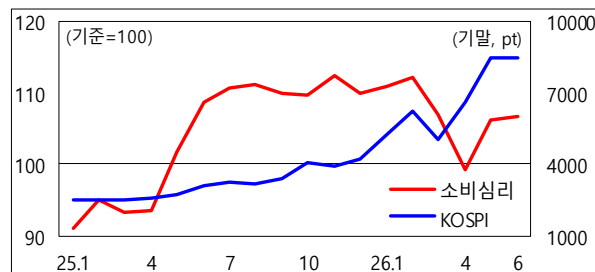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증시 활성화와 심리호조 등으로 금년 1분기 견조한 흐름
 - 2분기는 중동전쟁 영향이 제약요인이나 추경 등 정책효과가 보완, 하반기는 물가 등 전쟁영향이 점차 완화되며 증가세 지속 예상
- '27년은 수출호조에 따른 소득·자산여건 개선으로 양호한 증가세 예상

GDP 민간소비



* 출처: 한국은행

소비심리 및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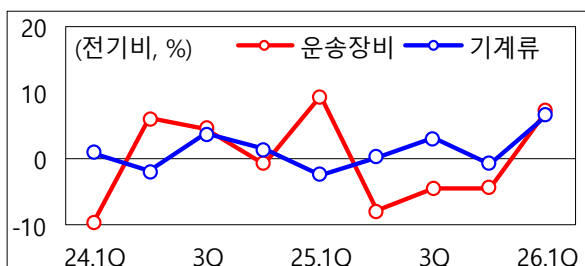


* 출처: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③ [설비투자] '26년 5.0% 증가 전망 ('27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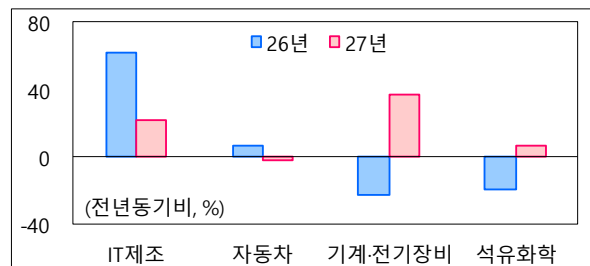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기계류·운송장비 모두 확대되며 금년 1분기 큰 폭 반등
 - * 설비투자(전기비, %): ('25.1Q)0.2 (2Q)△1.8 (3Q)1.3 (4Q)△1.6 ('26.1Q)6.6
 - 하반기는 반도체제조용장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 예상되나, 기계·전기장비,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 투자 둔화는 제약요인
 - *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전년비, %): ('25)18.7 / ('26.1Q)28.9 (4)55.6 (5)54.9 (6)42.4
- '27년은 반도체공장 증설,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으로 증가세 지속 전망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 출처: 한국은행

업종별 CAPEX 전망



* 출처: Bloomberg

4 [건설투자] '26년 0.2% 증가 전망 ('27년 0.8%)

- 건설투자는 주택착공 증가, 반도체공장 조성 가속화로 금년 1분기 증가

* 건설투자(전기비, %): ('25.1Q)△4.0 (2Q)△0.7 (3Q)0.2 (4Q)△2.6 ('26.1Q)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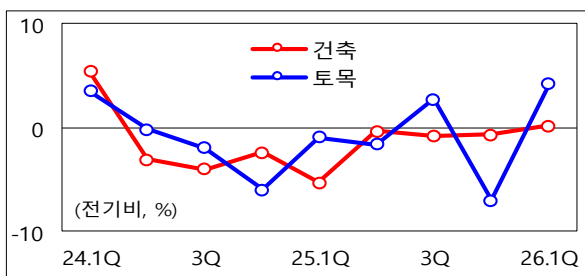
- 2분기는 중동전쟁發 공사비 상승, 자재수급 차질 등으로 제약, 하반기는 반도체 투자 호조, 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부진 완화 예상

* SOC 예산(조원, 추경 포함): ('24)26.4 → ('25)26.0 → ('26)27.7

- '27년은 건설수주 개선, 수급차질 완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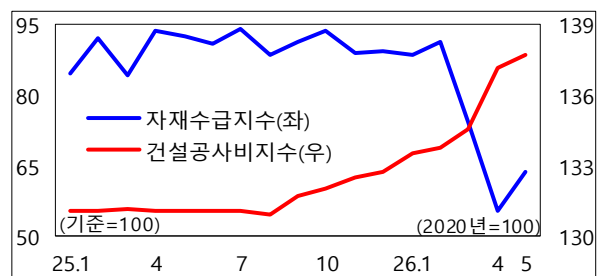
* 건설수주(전년비, %): ('24.上)5.0 (下)16.0 ('25.上)△3.0 (下)11.3 ('26.1Q)30.7 (4-5월)55.5

부문별 건설투자 추이



* 출처: 한국은행

건설공사비 및 자재수급지수



* 출처: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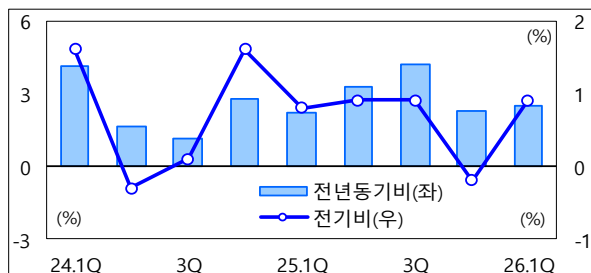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6년 3.2% 증가 전망 ('27년 3.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 확대, 정부 R&D 예산 증가 등으로 금년 1분기 증가 전환

* 정부 R&D 예산(조원, 추경 포함): ('23)31.1 ('24)26.5 ('25)29.7 ('26)35.6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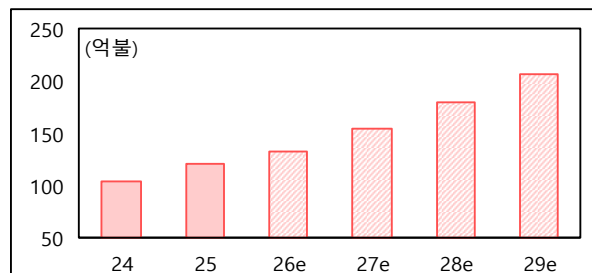
- 향후에도 영업이익 급증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AI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 증가 등으로 양호한 흐름 지속 예상

GD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출처: 한국은행

국내기업 소프트웨어 투자 전망



* 출처: Gartner

6 [통관수출] '26년 40.0% 증가 전망 ['27년 1.0%]
[통관수입] '26년 20.0% 증가 전망 ['27년 3.0%]

- (수출) '26년은 반도체·컴퓨터 등 IT 호조세로 당초 예상 큰 폭 상회
 - * 통관수출(전년동기비, %): ('25.1Q)△2.3 (2Q)2.1 (3Q)6.5 (4Q)8.4 ('26.1Q)38.4 (2Q)57.5
 - '25년 감소했던 非IT 부문 수출도 선박,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등 중심으로 증가 흐름
 - '27년은 석유류 가격 하락에도 반도체 물량 확대 등으로 증가 예상
- (수입) 반도체 수출·투자 호조에 따른 중간재·자본재 수입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확대 등으로 두 자릿수 증가 전망
 - * 통관수입(전년동기비, %): ('25.1Q)△1.3 (2Q)△1.7 (3Q)1.6 (4Q)1.4 ('26.1Q)10.8 (2Q)22.4
 - ↳ '26년 상반기: 에너지 +6.6% / 비에너지 +19.1%
 - '27년은 유가 정상화에도 내수 개선, 원자재 비축 등으로 증가 예상

7 [경상수지] '26년 2,900억불 흑자 전망 ['27년 2,450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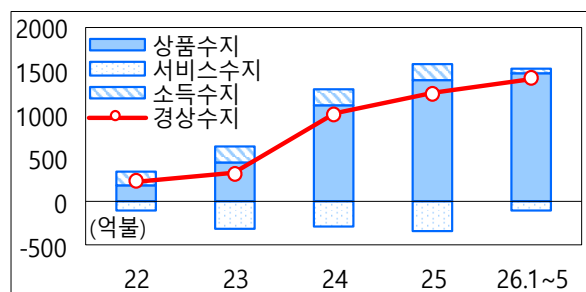
- '26년은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확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역대 최대 경상흑자 재경신
 - * 상품수지(억불): ('25)1,381 / ('26.1)152 (2)234 (3)357 (4)339 (5)379
 - ** 서비스수지(억불): ('25)△345 / ('26.1)△38 (2)△19 (3)△13 (4)△24 (5)△11
 - ↳ 여행수지(억불): ('25)△135 / ('26.1)△17 (2)△13 (3)1 (4)△0 (5)1
- '27년은 내수 개선에 따른 수입 확대 등으로 흑자폭 축소 예상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전년비, %)	'26년 상반기	1분기	2분기
IT	+146	+121	+167
반도체	+163	+139	+182
컴퓨터	+262	+169	+347
非IT	+10	+8	+12
선박	+18	+14	+23
바이오헬스	+11	+10	+13
이차전지	+11	+10	+12
화장품	+27	+21	+33

* 출처: 관세청, 무역협회

경상수지



* 출처: 한국은행

□ '26년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 전망 ('27년 17만명)

- '26년 고용은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등으로 당초 예상(16만명)보다 증가폭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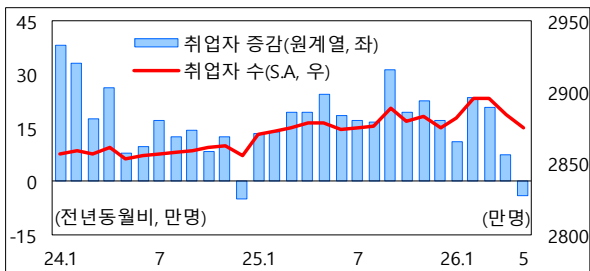
*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6.1)10.8 (2)23.4 (3)20.6 (4)7.4 (5)△4.0

↳ '26년 1~5월(월평균, 만명): (전체)11.6 / (서비스업)26.3 (제조업)△5.5 (건설업)△2.5

- 하반기는 중동전쟁 영향이 완화되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 회복 지연, 반도체 外 부문 둔화 등은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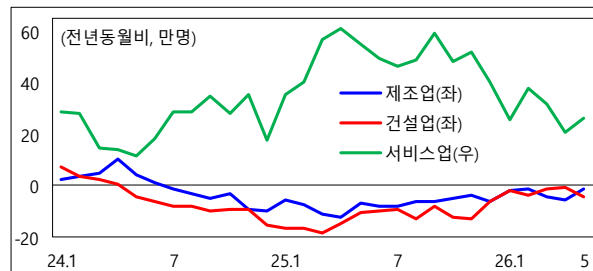
- '27년은 성장세가 내수 중심으로 이어지며 증가세 확대 예상

전체 취업자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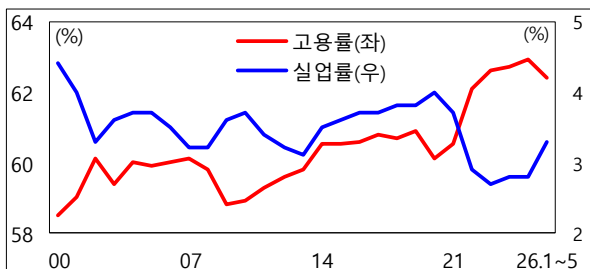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 고용률(15세 이상)은 63%대로 상승, 실업률은 보합 전망

- 고용률은 올해 하반기 이후 고용 회복세 등으로 상승('25년 62.9 → '26년 63.0 → '27년 63.1%), 실업률은 보합(2.8%)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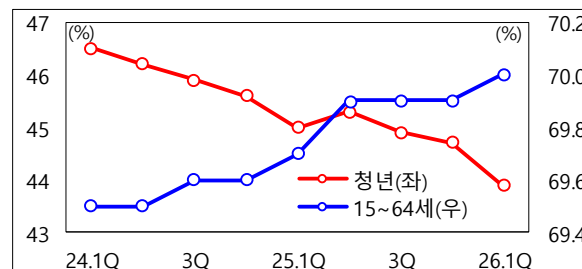
- 다만, 청년층은 고용률 하락, 쉬었음 40만명 내외 등 어려움 지속

고용률·실업률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15~64세 및 청년 고용률(계절조정)



* 출처: 국가데이터처

□ 중동전쟁 영향으로 '26년 2.6% 상승 전망 ('27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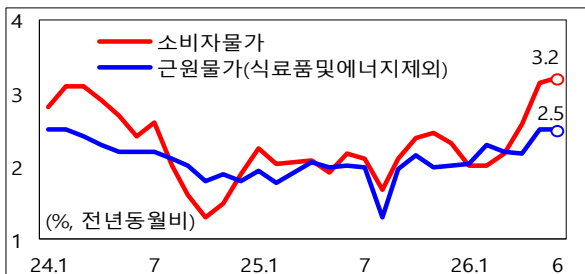
- '26년 상반기는 농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 안정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인해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세 확대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26.1)2.0 (2)2.0 (3)2.2 (4)2.6 (5)3.1 (6)3.2

-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 초중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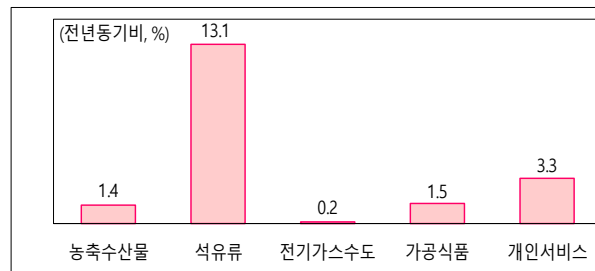
* 근원물가(전년동기비, %),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26.1)2.0 (2)2.3 (3)2.2 (4)2.2 (5)2.5 (6)2.5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 출처: 국가데이터처

품목별 물가상승률('26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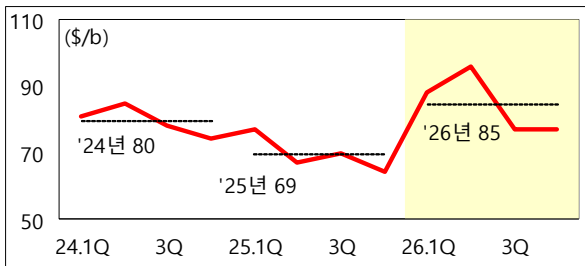


* 출처: 국가데이터처

- '26년 하반기는 중동전쟁 긴장 완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점차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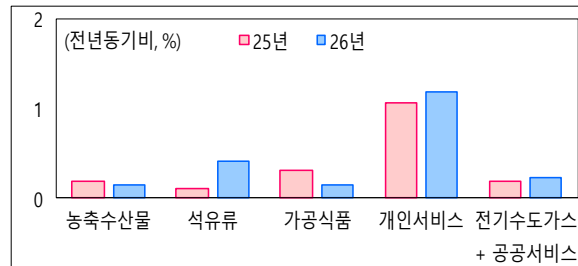
- 다만, 중동전쟁 협상 양상, 기상여건 등에 따른 에너지·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상존

국제유가(두바이유)



* 출처: 한국석유공사, 자체추정

품목별 기여도 전망



* 출처: 통계청, 자체추정

- '27년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확대에 따른 수요측 물가압력 영향으로 연간 2.2% 상승 전망

2026~2027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25년 실적	'26년		'27년 ^e
		1/4	연간 ^e	연간
전망 전제				
세계 경제(PPP)*	3.5	-	3.0	3.4
Dubai 유가(\$/bbl)	69	88	85	73
실질 GDP	1.1	3.8	3.0	2.2
민간소비	1.5	2.7	2.0	2.1
설비투자	1.5	4.4	5.0	3.3
건설투자	△9.7	△1.9	0.2	0.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2.5	3.2	3.0
경상 GDP	4.4	17.1	12.3	4.6
고용률(15세 이상, %)	62.9	61.8	63.0	63.1
취업자 증감(만명)	19	18	15	17
소비자물가	2.1	2.1	2.6	2.2
경상수지(억불)	1,231	744	2,900	2,450
상품수지(억불)	1,381	742	3,020	2,630
수출(통관, %)	3.8	38.4	40.0	1.0
수입(통관, %)	0.0	10.8	20.0	3.0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불)	△150	2	△120	△18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6.7월)

1. '26년 3분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재경부·한은·금융위·금감원·국토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기획처
가칭 중소·벤처기업 2030 글로벌화를 위한 수출 성장전략 마련	중기부
농축수산물 최대규모 할인행사 추진	농식품부·해수부
신선란 수입물량 확대(2억개 추가 수입)	농식품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재경부
실물인도거래(DF) 친화적 개편방안 마련	재경부
외화외평채 20억불 추가 발행	재경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금통위 의결 필요)	한국은행
산은 중소기업 대상 온렌딩 지원 확대(9.2→9.6조원)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택지 속도 제고방안 마련	국토부
공공매입임대리츠 신설 계획 수립	재경부·금융위
전세보증금 안심신탁사업 추진	국토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재경부·기후부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	산업부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	산업부·외교부
한국형 AI ODA 사업 추진	재경부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방사청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	과기정통부
AI 가전 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운영	산업부
K-문샷 프로젝트 미션별 로드맵 발표	과기정통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추가 출시(6,000억원 규모)	금융위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산업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2개)	중기부
부처별 지방우대 사업 발굴	기획처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 마련	재경부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마련	재경부·노동부
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재경부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신설	재경부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운영	재경부·금융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안 마련	기획처·교육부
아동 현금성 지원 개선방안 마련	기획처·복지부
목적세 재원배분 개선방안 검토	기획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재경부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 도입	재경부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	노동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신설 및 2개년 로드맵 발표	법제처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합리화 개선방안 마련	국조실
공장·창고 화재안전 강화방안 마련	재경부

2. '26년 4분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급 공식회의체 신설	재경부·한은·금융위·금감원
물가안정법 개정	재경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검토	금융위·국토부
중진공 정책금리 인상 최소화 노력	중기부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방안 검토	금융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개선방안 수립	국토부·금융위
부동산 정책대출 소득요건 개편	국토부·금융위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한국형 개발금융 법·제도적 기반 마련	재경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대체 수입비용 전액 저리대출 지원	재경부
초소형모듈원자로(MMR) 개발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과기정통부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	재경부
수요 연계형 차세대 전력 반도체 R&D 기획	산업부
전력반도체 민관협력 상용 파운드리 구축방안 검토	산업부
'27년 GPU 배분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슈퍼컴퓨터 6호기 운영 개시	과기정통부
글로벌 AI 허브 조성 추진	과기정통부·재경부·외교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국가데이터처
완전자율운행 핵심기술 개발 착수	해수부·산업부
글로벌 Top10수준 독자 AI 모델 확보·활용	과기정통부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육성방안 마련	복지부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 수립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과기정통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서비스 순차 개시	과기정통부
GVCM 탄소 크레딧의 블록체인 기반 관리·거래 방안 마련	재경부
R&D 성과확산 고속도로 구축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투자형 R&D’ 도입(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과기정통부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재경부
지역자율 R&D 신설(블록펀딩 방식 지원)	과기정통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국토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산업부·국조실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 마련(법인기부 도입, 인구감소·관심지역 우선 적용 등)	행안부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노동부
지방우대지수 구성 및 운영	행안부·기획처·산업부 등
지방우대 세제개편(조세특례제한법 및 후속법령 개정)	재경부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친화적 개선	재경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연계방안 마련	금융위·재경부
청년의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재경부
성장촉진형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기부
중견기업 성장 특별세액감면 및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점감구간 신설	재경부
EITC 소득요건 완화 등 기준 합리화 방안 발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재경부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노동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노동부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검토	재경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재경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추진	재경부
혁신제품 제도 개편(신산업분야 실증연계형 패스트트랙 확산 등)	재경부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 합리화	교육부
기초연금 개편방안 수립	복지부·기획처
규제샌드박스 통합 관리법 제정	국조실
드론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 발표	국토부·해수부·산업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마련	공정위

3. '27년 이후 추진과제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중·저신용자 대상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 검토	금융위
'27년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공급규모 확대	금융위·기획처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소득요건 완화	기획처·국토부
폐영구자석(희토류) 순환자원 신규 지정	기후부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 추진	산업부
핵심광물 우선 분리·회수를 위한 전기차, 전자제품 등 재활용 기준 개선	기후부
공동주택용 히트펌프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히트펌프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	국토부
R&D 투자세액공제 우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SMR 등)	재경부
중등인프라전략펀드(KIND 내) 신설	국토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i-SMR, MSR) 사업추진	과기정통부·기후부
국가안보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조항 신설(반도체특별법 개정)	산업부
글로벌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과기정통부
산업 분야별 제로트러스트 적용사례 지속 발굴 및 민간 자율 확산 유도	과기정통부
한은 기관용 CBDC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 추진	재경부
AI 데이터센터 기술·장비 국산화 및 수출 지원	과기정통부·산업부
로봇 클러스터·파운드리 구축(새만금)	산업부
핵심부품(엑추에이터, 센서, 로봇손 등) 전용 R&D 신설	산업부
소규모 AX 대상 지원 패스트트랙 신규 도입	과기정통부·기획처
한국형 IQT 신설 추진	중기부
K-우주데이터센터, 하이브리드 이착륙기 등 개발 착수	우주항공청
AI에이전트, 양자·보안, 광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도 프로젝트 적극 투자	재경부
첨단기술 제품·서비스 보험 인프라 구축	재경부
지역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 확대	재경부
지역관광 거버넌스 확대	문체부
청년형 ISA, 생산적 금융 ISA 출시	금융위·재경부
IP투자펀드 조성 확대	지재처
현장 맞춤형 노무제공자 재해 예방사업 지원 확대 추진	노동부·기획처
산업전환 일자리 허브 구축 및 한국형 AI 노출 지수(K-AIOE) 개발	노동부